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5년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 주요정책부문 –

2026. 1.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목 차

1. 평가개요 ····· 1

2. 평가결과 ····· 7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15

(1)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경제림 육성 ····· 17
(2)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국유림의 기능 강화 ····· 20
(3) 탄소정책 기반 구축 및 민간의 탄소중립 활동 확대 ····· 23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26
(5)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및 산촌 활력 증진 ····· 29
(6) 숲길·등산·레포츠 기반 및 서비스 확대 ····· 32
(7) 도시숲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생활환경 개선 ····· 35
(8) 녹색인프라 중심 수목원·정원 활성화 기반 확충 ····· 38
(9)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경영 안정화 ····· 40
(10) 임업직불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혜 확대 ····· 43
(11)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대응 강화 ····· 46
(12) 목재이용 활성화 ····· 49
(13) 산림분야 R&D 실용화 확대 ····· 52
(14) 지역과 연계한 산림일자리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 55
(15)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 58
(16)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이용기반 강화 ····· 61
(17) 핵심생태축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산림복원 ····· 63
(18)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 66
(19)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 69
(20) 산사태재난 예방·대비·대응 강화 ····· 72
(21)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 체계 구축 ····· 75
(22)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 증진 ····· 77
(2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외 산림협력 추진 ····· 80
(24)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여건 조성 ····· 82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85

[붙임] 2025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 103

1. 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와 연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효율적인 성과 창출 견인

- o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선정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이행 성과 등을 평가
- o 정책평가위원회 소위원회별 전문가 합동 TF를 통한 사전검토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의 완성도 제고

□ 자체평가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 유도

- o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수렴 여부를 평가하고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점검

  *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책반영 실적', '국민체감도(일반국민 2천명 및 365산림사랑평가단)'

□ 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객관성·수용성 강화

- o 소위원회별 평가점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소위원회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동일하게 조정(평균 표준편차 일치법 적용)
- o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로 평가 수용성 향상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 o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차년도 정책 및 평가방법 개선 등에 환류하고 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70%), 우수 부서·공무원 포상
- o 4급 이상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 지표를 자체평가 지표와 연계하고 평가결과를 전 직급 성과급 책정에 반영

  - 직무성과 평가 시 자체평가 결과 30% 이상 반영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o **(평가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 유도
- 전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주요정책 5개, 행정관리역량 1개 소위원회 구성

【평가추진 체계】

o 평가 진행 절차

상반기 평가 (정책형성)	상반기 평가결과 공개	부서 이의신청	위원회 재검증	현장설명회 개최
'25.7월	'25.8월 초	'25.8월 중	'25.8월 말	'25.8월~9월

하반기 평가 (정책집행·성과)	평가결과 공개	부서 이의신청	위원회 재검증	위원회 심의·의결
'25.12월 중	'25.12월 말	'26.1월 초	'26.1월 중	'26.1월 말

□ 평가방법

o **(상반기 평가)** 성과지표 대표성 및 적극성 등 「정책형성」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소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 평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소위원회 구분 없이, 모든 평가 위원이 전체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

o **(현장 설명회)**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소위별 산림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o **(하반기 평가)** 소위원회별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집행, 정책성과」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실시

o **(평가결과 공개 및 부서 이의신청)** 소위원회 평가결과(안)을 부서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수용된 경우 점수 조정

o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별 편차 조정 및 과제별 상대평가 등급 부여 후 최종 결과를 산림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등급	총 24개 관리과제
~ 상위 5% 이내	**A** (매우우수)	1위
5% 초과~20% 이내	**B** (우 수)	2, 3, 4, 5위
20% 초과~35% 이내	**C** (다소우수)	6, 7, 8, 9위
35% 초과~65% 이내	**D** (보 통)	10, 11, 12, 13, 14, 15, 16위
65% 초과~80% 이내	**E** (다소미흡)	17, 18, 19, 20위
80% 초과~95% 이내	**F** (미 흡)	21, 22, 23위
95% 초과 ~	**G** (부 진)	24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 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A' 등급과 'G' 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o 평가대상

- '25년도 산림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경제림 육성」 등 **24개 관리과제***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25.10월)으로 추가된 2개 관리과제는 기존 타 평가군에 포함되어 평가가 이루어져, 본 자체평가 대상(24개 관리과제)에서는 제외함

o 평가지표

- 3개 평가항목, 11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과제의 추진단계별 내용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선정

< '24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 형성 (15)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	5
	② 목표치의 적극성	5
	③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
2. 정책 집행 (25)	①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5
	② 관계기관(부서) 협업 우수사례	15
	③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책 반영 실적 및 여건 상황 변화 적기대응 여부	5
3. 정책 성과 (60)	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5
	② 성과지표 외 가시적인 성과	15
	③ 종합적 정책효과	25
	④ 국민 체감도	5
4. 가점 (+1)	핵심 민생과제 선정·추진 성과	+1

➡

< '25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정책 형성 (20)	① 관리과제의 적절성	3	신설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7	통합
	③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	분리
	④ 정책환류의 충실성	5	분리
2. 정책 집행 (20)	①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	8	통합
	② 문제해결형 협업 우수사례	7	배점 조정
	③ 현안 대응 및 갈등예방·해소 노력도	5	분리
3. 정책 성과 (60)	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0	배점 조정
	② 종합적 정책효과	35	통합
	③ 향후 기대효과	5	분리
4. 가점 (+1)	국정과제 추진 기여도	+1	-

2. 평가 결과

2. 평가 결과

(1) 총 평

□ **'25년도 22개 과(팀)의 24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o 매우우수 1개(4.1%), 우수 4개(16.7%), 다소 우수 4개(16.7%), 보통 7개(29.2%), 다소 미흡 4개(16.7%), 미흡 3개(12.5%), 부진 1개(4.1%)로 나타남

o A~B등급 이상의 우수 과제는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증진」 과제를 포함한 5개 과제이며, F~G등급의 미흡 과제는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국유림의 기능 강화」 과제 포함 4개 과제로 평가됨

□ **총 24개 관리과제의 4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미달성 성과지표는 5개로 평균 달성률은 89.6%임**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1.8%	87.2%	89.6%
100% 이상 달성 성과지표 개수	45개	41개	43개
총 성과지표 개수	49개	47개	48개
총 성과관리 과제수	24개	24개	24개

o 4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o 목표 미달성 지표는 「부실대부지 후속조치 완료율(%)」, 「비예산 제도 활용 국유림 확대실적(ha)」,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임가의 생산액 증가율(%)」, 「10ha 이상 산불 발생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율(%)」 5개 이며,

o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대내·외 여건 및 환경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부실대부지 후속조치 완료율(%)	85.5	76.7	89.7%	▸ 조치가 필요한 부실대부지가 특정 국유림관리소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실대부지 청문 등의 절차 진행에 따른 유예기간 등 행정조치에 시일이 소요되어 기한 내 조치가 어려움 * 전체 249건(관리소 평균 9건) 중 특정 관리소에 62건 편중(24.8%)
비예산제도 활용 국유림 확대실적(ha)	1,272	445	34.9%	▸ 대부지(임시특례) 및 공익사업 등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본 제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가 적었고, '대통령 긴급지시 시달(11.3,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관련 교환 처분 중단으로 미달성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임가의 생산액 증가율(%)	25.3	23.9	94.5%	▸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등 재해피해 증가 등에 따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 목표치가 미달되었으며, 임산물 생산액 전국 1위인 경북지역* 대형산불 발생으로 임산물 생산에 차질 발생 * '25년 보조사업 비율(백만원) : 경상북도 2,425(12.6%), 경상남도 2,602백만원(13.5%) / 전체 19,313백만원 * '24년 기준 임산물 생산액(억원) : 경상북도 13,866(18.8%), 경상남도 9,556(13.0%) / 전체 73,785억원
10ha 이상 산불 발생률(%)[하향]	2.7	4.6	58.7%	▸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당시 돌풍(27.6m/초)을 타고 빠르게 확산(8.2㎞/h)하여 산불이 동시 다발적(29건/일)으로 발생 -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이 분산되어 초동진화에 어려움과 임도 부재로 신속한 자원투입에 제약 - 피해지역은 소나무림 비율이 높고 고온·건조한 날씨로 연료물질이 마른 상태 * 소나무림 비율(전국 25%) : 안동 49%, 의성 44%, 청송 33%, 영양 33%, 영덕 34%, 산청 32%, 하동 28%, 울주 24% ** 3월 말(21~26일) 경북 북부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8℃, 강수량은 전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율(%)	96.0	89.4	93.1%	▸ (자연적) 재난급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급속히 증가 * 매개충 활동량 증가(우화 최성기 빨라짐) + 소나무 생육 여건 저하(이상고온 스트레스) ▸ (사회적)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추격형 방제 정책·예산의 한계

(2) 주요성과

□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 증진」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성과 및 달성원인은 아래와 같음

과제명	주요성과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 증진	▸한-프-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아시아 15개국 산불협력' 및 FAO '글로벌 산불허브(100여개 국가·기관)' 동참으로 전세계 산불 대응 주도권 확립 ▸고위급 산림정책 현안 논의로 REDD+ 부지확보·맹그로브 수종 도입(베트남), 산불협력(DR콩고), 지속가능한 목재·산림재난(한·중·일) 등 실용외교 성과 달성 **달성 원인** ❶ 프랑스 재정악화 속 공여국으로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긴급 **양자회의(3회)** 및 3자 간 **운영위원회 실시(9월)** ❷ 국제산림협력 활동을 국내에 알려 정책고객·대국민 체감도 향상 * 세계산림의날(3월), 사막화방지의날(6월), 산림생태계·평화산림 UN워크숍(8,9월)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여건 조성	▸대규모 국제감축사업(REDD+) 대상지(3개국, 1200만ha)를 신규 발굴하여, NDC 500만톤 달성 기반을 구축 ▸민간기업의 해외탄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을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 신규 대상지 : 온두라스 630만ha, 베트남 200만ha, 과테말라 350만ha **달성 원인** ❶ 협력국·재외공관·국제기구 공조를 통한 **사업지 발굴 및 외교협의** * (기존) 동남아 중심 (신규)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적극 탐색 ❷ 민관협력형 REDD+ 타당성 조사 추진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가) 외교협상, 사업지 확보 / (기업) 재원투자, 사업 이행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경제림 육성	▸산림자원 순환경영 기반 확대(경제림집중률 25.5 → 25.6%, 선도경영모델 구축) ▸초대형 산불 복구대응 및 산림재난에 강한 숲 조성(목재자원화율 50.4→ 50.5%)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임업기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기반 마련 **달성 원인** ❶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산림자원 관리방안** 발굴 및 정책이행 ❷ 민·관·학·산 지속적 소통으로 정책 수요에 충족한 신속·체계적 대응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및 산촌활력 증진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1,757만명(경제효과 2.1조원), 치매예방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치유서비스 제공(46만명/만족도 81→86점) ▸산촌 소득모델 육성(매출액 447백만원(122% 성장))으로 국민체감형 휴양·치유 실현,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달성 원인** ❶ 산림휴양·치유인프라 확충(휴양림+4, 진안치유원 등) 및 서비스 고도화(예약시스템 개선 등) →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❷ 치매·암생존자·임산부·청년 등 대상별 맞춤 치유프로그램 확대와 보건·복지기관 협업 → **참여자·만족도 지속 증가** ❸ 산촌자원 기반 브랜드·체험·관광 상품화하고 컨설팅 지원, 마케팅 강화 → **산촌마을 소득 증가, 생활인구 유입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이용 기반 강화	▸국가전략에 부합한 산림보호구역(3천ha) 확대 및 OECM(4천ha) 대상지 발굴 ▸가리왕산 곤돌라 유지여부 관련 갈등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합의 도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1.5천건) 등 산림환경이슈에 적극 대응 **달성 원인** ❶ **산림보호구역** 대상지 발굴 및 환경단체 등 협업을 통해 **지정확대** ❷ **협의체 운영(12회)**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갈등 요인 사전 제거** ❸ 첨단기술 활용한 단속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관심도 제고

(3) 개선·보완 사항

□ **「국유림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대국민 기여도 제고」 등 4개 과제는 미흡 또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o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국유림의 기능 강화】** 과제는 2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협업성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목표 달성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실효성과 목표 수준을 재설계하고, 다양한 부처(기관)와의 협업구조 강화 및 성과 달성도를 정량·정성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o **【지역과 연계한 산림 일자리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과제는 추진일정 준수율이 90%에 그쳤으며, 협업성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요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일정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협업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갈등 발생 요인과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제시할 필요

o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과제는 2개의 성과지표 중 1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의견수렴 절차 및 정책환류의 구조가 미흡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잠재 장애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소 부족함

☞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강화하고, 단계별·체계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o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과제는 추진일정 준수율이 94.1%에 그쳤고, 2개의 성과지표 중 1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정책환류에 대한 홍보실적이 부재하고 외생변수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 증가로 국민체감 효과 창출에 한계 발생

☞ 일정준수율과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생변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성과 창출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 리 과 제 명	평가결과
1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경제림 육성	**B**
2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국유림의 기능 강화	**G**
3	탄소정책 기반 구축 및 민간의 탄소중립 활동 확대	**E**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D**
5	산림휴양·치유서비스 제공 및 산촌 활력 증진	**B**
6	숲길·등산·레포츠 기반 및 서비스 확대	**C**
7	도시숲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생활환경 개선	**C**
8	녹색인프라 중심 수목원·정원 활성화 기반 확충	**C**
9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경영 안정화	**E**
10	임업직불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혜 확대	**D**
11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 대응 강화	**D**
12	목재이용 활성화	**D**
13	산림분야 R&D 실용화 확대	**E**
14	지역과 연계한 산림 일자리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F**
15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D**
16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이용 기반 강화	**B**
17	핵심생태축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산림복원	**C**
18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D**
19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F**
20	산사태재난 예방·대비·대응 강화	**E**
21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F**
22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 증진	**A**
2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외 산림협력 추진	**D**
24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여건 조성	**B**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경제림 육성	B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산림자원 순환경영 기반 확대(경제림집중률 25.5 → 25.6%, 선도경영모델 구축)**

- 가치 높은 경제수 조림(11천ha), 체계적인 숲가꾸기(142천ha)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여

  * 경제림조성(11천ha), 산불예방숲가꾸기(15천ha), 공익림가꾸기(23천ha) 등 맞춤형 숲 관리

- 산림자원 순환경제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 맞춤형 컨설팅 지원(7개소*)으로 선도단지 성과 제고 및 경영모델 발굴

  * (4년~8년차) 5개소(춘천, 무주, 횡성, 음성, 장수) / (완료 단지) 2개소(진안, 거창)

- 수요자 중심*의 경영모델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산업체 등 의견 수렴

  * '25년 목재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8.28~8.3 1), 선도단지 팸투어 실시(11.14일)

순천 산림경영단지(운영협의회)

선도경영단지 팸투어

물류드론 활용 묘목 운반

o **임업기계화 기반의 지속가능한 목재수확기반 마련**

- 산림자원 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기계 지원 체계 확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기계장비 도입(35대[드론, 전동화])

  * 탄소배출량 저감 및 작업자 안전성 확보(진동저감 30%), 사업기간 단축(작업일수 3일 단축)

- 임업용예불기를 면세유 지급대상 장비에 포함(기존 10종 → 확대 11종)

  * 임업용 예불기 추가로 인해 연간 4,690만원의 임업생산 비용 절감

- 생활권 주변 목재수확 위험도 평가제 도입(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25.12.)

  * 산사태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진단 및 평가를 국·공·사 목재수확 인허가 과정에 반영

o **초대형 산불 복구대응** 및 **산림재난에 강한 숲 조성**(목재자원화율 50.4→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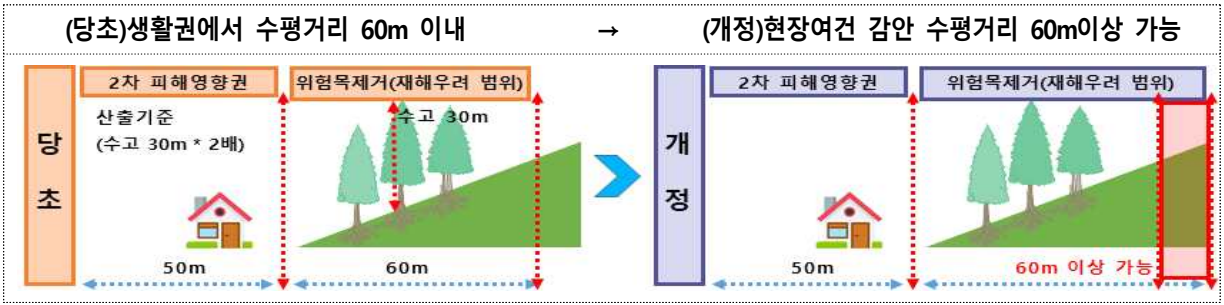
-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피해(104천ha, 9개 시군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 구축 및 조림복원 관련 제도 지원

* 중앙 5개 복구지원반(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24명) + 지방지역협의회(9개 시군구)

** 산불피해지 조림복원 매뉴얼 확정 및 배포('06년 이후 최초 개정, '25.12월)

-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위험목 제거(1,224억원, 2,323ha)

-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확대를 위한 지침 개정('25.4.22.)



- 산림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통한 숲관리 역량 강화(산불예방숲가꾸기 15천ha)

- 산불위험지역 내 주요 산불연료 제거 및 내화수림대 조성을 통한 안전구조 공간 구획 설정·관리

* 산물수집 : '23년 15→'24년 17→'25년 12ha, 내화수림대(누적) '21년 383 → '25년 1,941ha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경제림 육성단지 내 경영 불가능 임지가 일부 포함되어 제외 필요

- 행정 과정에서 지목 변경 등을 파악하지 못해 보호구역이 경제림 육성단지로 중첩된 사례가 발견되어 일부 재편 추진('25.5월)

* (기존) 394단지, 2,021천ha → (재편) 394단지, 2,020천ha, △115ha 제외

-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구획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재편 필요

o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부실 사례 발생에 따른 품질 제고 필요

- 대상지 선정 부적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위반* 등 부실사례 지속 발생 →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방제기간 이외 실행 등

- 숲가꾸기 산물 수집 강화, 산불예방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등 지침 미비사항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됨 ►관리과제의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제시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명확하나 측정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 필요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통계와 사례 등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현장의 산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킴 ►다양한 정책환경과 현장의견을 반영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전년도 평가 결과와 국회 등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정책을 수립함 ►자체평가 결과, 국회, 언론보도까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책 환류가 이루어짐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숲 구조 개선 지적에 대응한 구조 전환 시도의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홍보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평지 임업·양봉은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고난이도 과제로 평가되며, TF 운영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전반적으로 현안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돋보임. 다만, 현안과 갈등이라기보다는 본연의 미션과 연관된 노력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지정해제와 기계도입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성공모델 제시, 구조 개편, 목재자원화율 등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해당 수치가 갖는 정책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음
		중	►이례적 산불에 따른 긴급벌채 수요에 다각도로 대응하였으며, 응급조치·예산지원 등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매우우수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매우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2030년까지 현재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수치가 국민 후생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충분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3-4. 국정과제 성과 기여도(+1점)	상	►경영기반 구축과 생산기반 확대 측면에서의 노력이 인정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	합리적 경영·관리를 통한 국유림의 기능 강화	G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확대하는 국유림〕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공익기능 제고 및 산림자원 기반 육성

o 지속적 **국유림 확대**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 **(사유림 매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공익임지 및 경영임지 확대

  * 공익임지 매수 실적 : ('24) 1,017ha, 24.25% → ('25.12월) 1,181ha, 26.79%

- **(사유입목매수)** 조림대부·분수림 입목 매수로 국가 직영임지 확보

  * 대면적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지(경북 영양군) 2,157ha 사유입목 조사완료

  * 대규모 분수림 분할매수계획(ha) : ('23) 2,064, ('24) 2,315, ('25) 2,157, ('26) 2,197, ('27) 2,230

- **(교환제도 등)** 국유림 교환, 타부처 임야 취득 등 비예산제도 국유림 확대

  * 국유림 교환 취득실적 : 486ha, 타부처 임야 취득 실적 등 : 33ha

〔협력하는 국유림〕 지역사회와 경영협력으로 상생발전하는 국유림

o 국유림 활용 지자체, 지역주민 등 **국유림 경영협력**으로 **지역상생 발전 도모**

- **(공동산림사업)**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자산 육성 및 경제 활성화**

  * 공동산림사업 협약 실적(건) : ('23) 60→ ('24) 79 → ('25) 85

  * '25년 신규협약 : 총 6건(산림소득개발 1, 산림공익시설 1, 산림탄소상쇄 2 외 2)

- **(무상양여)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국유임산물을 통한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

  * 무상양여 주민소득 실적(억원) : ('23) 66→ ('24) 57 → ('25) 70

- **(경영대행)** 국가 차원의 전문적 산림 경영·관리로 **국토자원의 건강성 확보**

  * 산림경영대행 실적('25) :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358ha(숲가꾸기 등 17건)

〔도움주는 국유림〕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규제 완화로 원활한 공익사업에 기여

- **(제도개선)** 국유림 내의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실측도→임야도 사본)로 규제 완화

* 측량 소요기간(1~2개월) 단축과 측량비용(연간 약 39백만원) 절감 효과로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에 기여(「국유림법 시행규칙」을 개정 '25.9.15)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2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관리과제의 세부 구성(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o 또한, 협업성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목표 달성수준과 향후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G"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산주의 고령화로 사유림 소유구조가 파편화되고 부재산주가 늘어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부재산주 증가추이 : ('12) 44.0% 1,105천명 → ('24) 56.0% 1,211천명

- 국가 매수 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산주의 산림자산 유동성 제고를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 필요

☞ 임지를 구하기 어려운 산림경영 의지가 강한 귀산촌인, 임업인 등에게 산지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지거래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신규 사업으로 국회 예산 증액 요청**

☞ '산지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산지 중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28)

* 산지은행 플랫폼 ISP 수립 추진('26) → 플랫폼 구축('27) → 플랫폼 운영('28~)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하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제시(추진일정 등) 필요 ►국유림 관리 목표를 지역균형발전, 청년임업인 유입 등과 연계해 정책 구조를 입체화할 필요(디지털 기반 통합경영시스템 도입도 고려 바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높으나, '국유림의 확대 실적'의 질적 측면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중	►정책 환경 분석, 통계자료 제시가 충실하나 SWOT 분석과정의 정교화가 요구됨 ►현장 의견수렴 사례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참여 주체가 제한적임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중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환류 및 실행 내용이 충실하나, 지표나 정책설계 개선에 대한 연결이 다소 부족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중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임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관계기관 간 협업이 요구되는 과제이나, 국유림 확대·고도화와의 직접적 연계성은 제한적이며 서류 간소화는 성과로 확인되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의원실 및 위원회에서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62.3%	►성과지표1의 목표치를 90% 미만 달성 ►성과지표2의 목표치를 85% 미만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하	►신규 협약 체결과 무상양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중	►성과지표 외 추가 성과가 제시되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다소 제한적임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하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에 미칠 영향이나 이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3	탄소정책 기반 구축 및 민간의 탄소중립 활동 확대	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2030 NDC 달성을 위한 산림청-지자체 소통협의회를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 개선사항 발굴 등 이행력 제고

* 2030 NDC 산림 부문 목표/실적 점검 및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개선 논의

o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림 및 목재제품 등 산림 부문의 탄소흡수량 가치(4,148만tCO_2) 부각

* 국내 등록 차량(2,640만대)의 연간 CO_2 전체 배출량 대비 1.3배 흡수 강조

o 산림탄소상쇄사업 산림탄소흡수 인증량 거래 창구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24년 대비 16.8% 탄소흡수원 활용량 증가

* 탄소흡수원 활용량: ('24) 6,316tCO_2 → ('25) 7,374tCO_2 (16.8% 증가)

- 산림탄소상쇄제도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판매자 직접 거래 창구 마련 및 산림탄소흡수 인증량 이중거래 방지로 신뢰성 제고
- 산림탄소흡수량 활용 가이드북 제작·배포, 민간(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한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 확대(+1,600tCO_2)

o ESG 협약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로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현

- 유한킴벌리 등 민간 협약기업의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을 통해 기후재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 경북 안동시 (규모) 28ha (사업기간) '25~'30

- CJ대한통운·포스코엠텍 알루미늄캔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탄소중립 참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 (대상) 산림휴양시설 15개소 (수량) '25년 알루미늄캔 수거 0.8톤

o 국민주권시대, 수요자 중심의 산림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12월)

-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 1천여 건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내부 의견, 산주·임업인 간담회 실시를 통한 최종안 도출*

* 중점전략: ①산림관광을 통해 산촌을 살리는 산림, ②사유림 소유자가 걱정없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산촌 정착을 지원하는 안전한 일자리 조성, ④미활용 산림자원을 지역 목재자원으로 순환

o 산림녹화사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역 중심 주민 참여 등으로 산림녹화 정책의 세계적 중요성 인정

- 한국전쟁 이후 황폐된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에 대한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25.4월, 9,619건)
- 지역 산림계 중심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양 증가 및 황폐국·개도국에서 산림녹화·탄소흡수원 선진국 도약

* 반세기 만에 산림자원의 양 15배 증가, 국가재건 및 탄소흡수원 증진에 기여한 세계적 유일무이한 산림녹화 성과

- 국가기록원 업무 협약*을 통한 콘텐츠 구성, 등재기념식 개최**로 산림녹화 기록물의 희소성, 희귀성, 독창성 등을 중점으로 정책 홍보

* 국가기록원 업무협약(5월)을 통해 산림녹화 기록물을 콘텐츠로 개편하여 산림녹화에 대해 홍보 및 이용자 접근성·편의성 강화

** 등재 기념식(4.17.) 및 관련 심포지엄(11.5) 개최(산림청, 국가유산청, 국가기록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사무총장 독일·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과제의 세부 구성과 정책환경의 분석(SWOT)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이 부재함

o 또한, 정책환류와 과제 간 연계성이 낮고,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되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E"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온실가스 감축과 병행한 산림의 기후 위기 적응 정책 강화 필요

- 탄소흡수원법 개정 등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마련, 정보 및 통계 관리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내용 신설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강화해야 하나, 현재 산림의 기후 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 미비

- 지역단위 산림(공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단위 산림계획 제도화

o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구

- 탄소크레딧 민간 플랫폼과 협력 등 산림탄소흡수량 수요처 확대 ·발굴

*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가 낮은 상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회원사 및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수요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리과제 세부 구성에 대한 내용 역시 다소 부족함 ►목표, 과제추진을 위한 세부일정의 구체화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중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은 명확하나, 성과지표2의 경우, 측정방법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다소 미흡 ►목표치가 추세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전년도 실적 대비 상승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하	►PEST분석-미시분석 등을 통한 SWOT 분석과정의 구체화가 필요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 부재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하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평가 대상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부족함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인지 국회 지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법 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 성과가 있으나, 홍보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정책적 노력은 인정되나, 문제인식의 구체성과 난이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며, 민간기업 및 산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하	►논의의 장은 조성되었으나, 반대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는 마련되지 않음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중	►산주 편익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교육 기회 확대의 실질적 성과는 다소 제한적임
		중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탄소흡수 인증량의 증대는 성과지표인 '활용량' 증대의 전제가 되므로 일부 중복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음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민간의 탄소중립 활동 확대를 통해 산주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특성화학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취약계층) 취약계층 숲체험기회 확대로 산림복지서비스 형평성 도모

- (인프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확대

  * 나눔숲(21개소), 목재인테리어(34개소), 무장애나눔길(18개소, 29km), 도시숲 무장애 환경 개선(7개소)으로 산림복지 체험 환경 확충

- (숲체험)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로 수혜자 전년대비 7.7% 증가

  * 가구 단위 발급방식 도입으로 바우처 현장 사용률 전년 동월 대비 13.4%p 상승

  ** 바우처 수혜 인원(명) : ('22) 5만 → ('23) 6만 → ('24) 6.5만 → ('25) 7만

- (수목장림) 취약계층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 및 무연고자 안치지원 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장례비 및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가족목 28건, 30년), 충청권 무연고 사망자 국립기억의숲(보령) 안치 지원(8위)

o (교육문화) 교육·문화 등 폭넓은 산림복지 제공으로 정책 인지도 제고

- (유아) 도시생활권에서 숲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조성

  * 도심권 부산 동매산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등 '25년 27개소 조성(누계 526개소)

- (청소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소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 탄소중립 숲교육, 청소년 심리지원, 산림분야 진로교육, 직무 체험 등(28만명)

  ** 특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장애인 심신 안전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12학급)

- (청년)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숲교육 운영(1천명)

  *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경계지능인 청년 자립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숲교육포털) 산림교육 종합 정보제공 채널 구축으로 산림교육 공급자(전문가, 전문업, 교육·양성기관)-수요자 매칭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

  * 프로그램 인증관리, 전문가 교육자료 제공, 교육기관·전문업 등록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 위탁사업 실적 관리 및 관련 통계 제공 등

- (문화행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융·복합형 산림문화행사 개최

* 경기도, 광주시와 함께 제24회 산의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10.18, 20만명)

** 문화컨텐츠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영화소풍, 북콘서트, 우리숲페스타 등)

o **(민간산업)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전문업 산업화 지원**

- (전문가 육성) 양성기관 평가제도 개선 등 자격관리 강화 및 자격증 신규취득자 대상 현장체험형 사업 추진으로 전문가 자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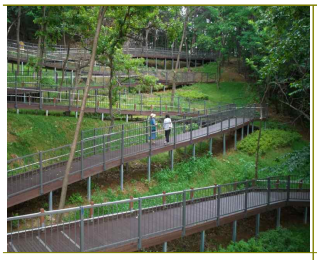
* 평가제도 개선(자체평가→문제은행을 통한 공통평가)을 위한 실태조사('25.7~10월, 15개 양성기관) 및 자격증 취득자 144명 대상 교육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증진

- (창업 활성화) 창업 기초 교육 17개 교육과정 운영 및 해커톤캠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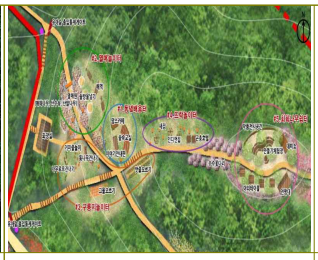
* 72개 기업 중 15개 기업 선정(예비창업 2개소 포함)→사업비 지원, KPI 설정에 따른 사업화 모니터링

- (사업 확장) 보유 프로그램 국가인증 컨설팅,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 인증지원(42개소, 64회), 온라인 기획전 운영(17개소), 온라인스토어 입점지원(10개소), 마케팅행사 운영(87개소, 6회) 등 사업역량 제고



무장애나눔길 조성



동매산 유아숲체험원

산의날 및 산림박람회

해커톤 캠프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교육이수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 국가자격증인 산림교육전문가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교육+이론·실기평가) 시 자격을 부여

- 자격증이 남발된다는 일부 외부 지적이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이수 및 평가제도 개선 필요('24 국정감사)

☞ 조치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며, 관리과제 세부 구성에 대한 내용 역시 부족함(추진일정 등) ►연간 계획에 대한 구체화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 및 대표성 높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SWOT 분석, 간담회, T/F 운영,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반영하고 있음 ►분석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계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와 외부지적 모두 구체적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실제 반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관련 지침 개정과 제도화까지 진행되고 있음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중	►홍보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노력은 다소 미흡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특수학교 숲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으로 특수학생 사회적응력 강화라는 교육성과에 대한 구체성이 제한적임 ►교육부, 학교와의 협업 노력과 인정교과서 승인이라는 결과 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향후 특성화고 확산에 대한 계획 이행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민간성장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진함 ►녹색자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산불지역 주민지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양한 긴급상황에 대한 노력이 기존사업·인력·예산인지 신규노력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취약계층 중심의 교육 및 서비스 실적을 개선하고, 다양한 계층으로의 수혜확대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하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국민체감 향상을 위한 홍보체계 강화 측면에서 문화행사와 축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로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효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정성·정량 예측치 제시가 요구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5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및 산촌 활력 증진	B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국민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휴양·치유인프라 확충

- 자연휴양림(4개소), 숲속야영장(4개소), 산림욕장(3개소)을 신규 조성하고 시설보수(150개소)를 통해 산림휴양 체험 기회 확대
- 국산목재 활용 국립금산자연휴양림 개장(9월), 체류형 산림치유 기반시설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장(전북 진안, 11월)
- 교통약자 등 접근성 제고 및 치유 일상화를 위해 도심권 치유의 숲 조성

* ▲(조성중) 울산('24~'27), 대구('24~'28), ▲(조성예정, 정부안 반영) 부산('26~'29)

-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 다자녀 우선예약 시설 확대(37→42개소), 다자녀 가정 주차료 면제(5월) 등

o 산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산촌·귀산촌 지원체계 강화

-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최초 지정으로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 산촌활성화지원센터(2개소) : 임업진흥원('21.3 지정), 청년파트너스('25.5 지정)

- 산촌활력특화사업(12개소) 추진으로 산촌형 소득모델 발굴·육성

* '25년 지원대상 : (신규) 가평·여주 등 8개소, (2년차) 양평·횡성 등 4개소

- 임업인의 인허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 완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5.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기준 : (기존) 사업계획 면적 → (완화) 실제 개발 면적

o 명품숲 등 우수 산림 인프라를 산림생태 관광자원으로 육성

- 산림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산림관광코스 발굴(10개소)

* 코스 발굴 지역 : 영양, 울주, 옹진, 진안, 장성, 횡성, 장수, 칠곡, 거창, 정읍

- 산림축제지도 배포(7월), 100대 명품숲 기획 홍보(20회, 온라인 기사) 및 여행 인플루언서 활용 SNS 홍보(명품숲 5개소, 블로그·인스타 조회수 총 94만)

o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의 역할 강화**

- 임산부 숲태교, 산모 산후조리원 연계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 주기별 프로그램 : 임신준비(숲동행) → 임신(숲태교) → 출산(내맘돌봄)

** 협업기관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임신준비), 국립재활원(숲태교), 공공산후조리원(출산)

- 항노화 표준 산림치유프로그램 확대*로 노인성 질병 예방(치매안심센터 협력)

* 치매예방프로그램 : ('23) 15,363명 → ('24) 53,723명 → ('25.10월) 17,569명

<table>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금산자연휴양림 개장(9월)</td>
<td>진안고원산림치유원 개장(11월)</td>
<td>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td>
</tr>
</table>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산촌·귀산촌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필요**

- 산촌정착 및 귀산촌 교육 등의 사업 예산이 '24년 종료되어, 산촌 활력특화사업(8억원, '24~) 외 관련 예산이 부재한 상황

- 인구소멸위기 산촌의 활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 인구유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필요

o **새로운 재난 유형에 따른 산림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

- 현행 산림재난 대응체계, 새로운 기후재난 유형 및 특성(폭염, 집중호우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산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주체의 의무 및 지원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의 목표가 연계성이 높으며 명확함 ►세부 구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 제시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 높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귀산촌 실태조사와 산촌기초조사 등 실증 기반의 정책환경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시스템 구축, 법 제정 추진 등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연계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 국회 지적, 민원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의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이 충실히 제시되었음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횟수 및 실적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치유관련 3대축인 산림청·농림부·해수부와의 연계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상호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피해 기간 중에도 신규가입자, 감면대상 인증 등이 일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유연한 대응 노력이 뒷받침된 성과로 보이나,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예방에 관한 대책은 다소 부족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보건의료 협업을 통해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함. 숲경영체험림은 현장임업인들로부터 운영 및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이 요구됨
		상	►국립치유의 숲 조성예산 확보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과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민관협력형 모델로의 전환이 필수적임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전국적 대응체계로 확대보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범정부자살예방대책본부 참여 등 부처·기관간 네트워크 확대로 산림치유의 위상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4. 국정과제 성과 기여도(+1점)	상	►산촌형 특화사업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의 핵심수단으로 가치가 높음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6	숲길·등산·레포츠 기반 및 서비스 확대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국내 최초로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시범운영

- 동서트레일 전면개통('27) 전 일부구간에 대해 국민들이 걷고 머물며 백패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여 장거리 숲길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 노선(17구간, 244km), 안내소(5개소)·대피소(23개소) 등 운영, 인력배치(6명)

- 실제 개통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여 국민의견 수렴, 개선·보완(6~11월)

  * 장거리 백패킹, 소외계층형, 산림복지전문업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10회 이상)

  ** 숲나들-e 예약(패스발급), 노선정보·편의시설·체험·이용수칙 등 안내콘텐츠 제공

- ESG 협약·기금조성 및 동서트레일 활성화방안 마련(연구)

  * 산림청-코오롱-트레킹센터 간 ESG 협약('25.10) 체결 및 기금 조성

  ** 동서트레일 거점마을 연계 지자체, 기업, 지역참여 모델 연구

o 국가숲길 운영체계 정착 및 시설 확충 등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국가숲길 운영·관리 지침 마련으로 국가숲길별 지역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기반 강화 및 현장 소통창구 마련

  * (지침내용)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운영·관리 계획, 이용·안전관리, 정보제공 등

- 숲길의 이용자쉼터·안내소·거점센터 신규 조성 등으로 시설 확대 및 전년 대비 숲길 이용객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이용 성과 증가

  * (시설 확대) 이용자쉼터 조성$^{+신규2개소,\ +추가1개소}$, 안내소$^{+5개소,\ 1개소}$, 거점센터$^{+1개소}$

  ** (이용 성과) 숲길이용객수 312 → 357만명$^{14\%\uparrow}$, 프로그램 참여 15→17만명$^{11\%\uparrow}$

- 숲길분야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

  * 숲길 조직 신설(국가숲길계,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및 인력 6명 확충

- 숲길분야 정책 효과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 추진

  * 국가숲길 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방안, 지역활성화 연계 중장기 숲길 운영·관리 방안

o **산림레포츠·등산 수요 대응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 (산림레포츠센터) 거점 지역에 산림레포츠 교육·문화 확산 기반 조성

  * (국립)문경(357억원, '22~'27)·강릉(250억원, '23~'27)/(공립)밀양(250억원, '2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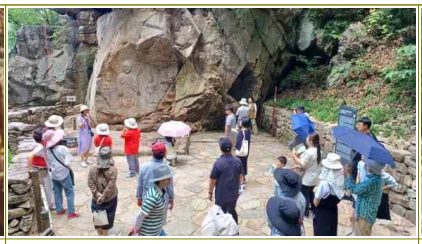
- (등산학교) 지역별 균등하고 체계적인 등산·트레킹 제공 기반 구축

  * (국립) 보은(110억원, '23~'26) / (공립) 장흥(80억, '24~'27)

- (제도개선)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로 대국민 산림복지 향유 기회 증진

  * 산림레포츠시설 관련 고시 개정('25)으로 플라잉디스크 종목 추가(13종→14종)

동서트레일 시범 운영



연계 프로그램 계획(내포숲길)

국립등산학교 개원(밀양)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가숲길 운영·관리 제도의 내실화 추진 필요**

- 「산림휴양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고 운영체계를 구체화하여 숲길 제도의 내실화 보완

  ☞ (개선·보완 방안 제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숲길 권한 위임 범위 근거 마련 및 정례 소통을 통한 협의체 운영

o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차별 실집행 이월 발생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개선·보완 방안 제시) 주기적 집행점검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으로 집행률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정책 목표가 숲길 및 산림레포츠 수요 확대에 대한 장기적 비전(2037년까지 이용자 수 증대)과 연결되어 명확하고 구체적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 높으나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만족도 조사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유관기관, 탐방객,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가 이루어진 점이 우수함 ►PEST분석, 미시분석을 통한 SWOT분석 연계가 필요하며, 현장 운영자의 피드백 반영은 제한적임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추진 일정에 PDCA 사이클 적용 및 이행 점검 계획 반영으로 환류체계 기반이 확보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고객만족도 조사원 안전강화 및 품질관리 노력이 인정되며 각종 홍보를 위한 노력도 인정되나, 동서트레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확인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복잡한 협의 구조에서 장애 및 갈등요인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보임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헬기추락사고 언론대응은 사후관리 측면이므로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다른관점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중	►국가숲길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프레임을 사회적·경제적·관리적·자원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숲길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필요
		상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로 제시한 동서트레일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도출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다소 소극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아쉬우며, 향후 이용객에 대한 명확한 추정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됨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추진결과-기대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하여 정책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함 ►민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레포츠분야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7	도시숲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 생활환경 개선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도시숲 198개소(262ha) 조성으로 미세먼지, 탄소중립,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및 휴식·여가 장소 제공으로 도시민 삶의 질 개선

- (도시숲 198개 조성) 국유지 도시숲,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으로 도시민 일상에 산림복지 서비스 공급

  * 걷기, 달리기, 요가, 휴식, 커뮤니케이션 장소 제공 등 광의의 산림복지 지속

- (기후재난 대응) 262ha의 도시숲 조성으로 연간 약 1,808tCO_2/ha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천kg/ha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둠

  * 1ha의 도시숲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6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함

o 소통의 장 마련, 현장점검 등 총 302건의 도시숲 등 관리행정 추진

- (도시숲) 86회의 현장점검·대면영상회의·지자체 관리자 간담회 등으로 현장 중심의 도시숲 관리 강화, 담당자 전문성 향상유도

  * 예산집행점검 대면·영상회의 29회, 사업지 현장점검 41회, 광역지자체 간담회 2회, 컨설팅 14회

- (가로수) 계획 수립 점검 2회, 담당자 교육 5회, 간담회 1회, 봄철·여름철(폭우)·동절기 현장점검 13회 및 부정언론보도 대응 4건

  * 계획수립(1단계) → 실무과정(2단계) → 교육현장점검(3단계)으로 체계적 관리 실시

- (관리지표) 도시숲 관리지표(경기, 제주) 측정·평가 및 교육, 점검 등 관리

  * 33개 기초지자체 관리지표 측정, 담당·사업자 실무교육 3회, 모니터링 세부검증 188개소

o 국민과 기업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과 대국민 홍보로 정책 저변 확대

- (무궁화 알리기) 광복 80주년 대축제(5.3만명), 묘목 19,375그루 보급, 무궁화 바로알기 캠페인(3천명), 입법세미나 등으로 무궁화 인식 267% 상승

* 묘목보급(2월) → 교육·체험캠페인(4~10월) → 대축제(8월) → 입법세미나(9월)

** 나라꽃 무궁화 인식 : [사업 전] 5점 만점 中 4점 '그렇다' 이상 34% → [사업 후] '그렇다' 이상 91%

- (민간, 기업 참여) 도시숲 포럼, 세미나 개최 및 아카데미 운영

* 포럼 : 생명의숲·서울그린트러스트, 신한지주, SK임업, 등 기업, 평택시 등 80여개 기관·법인·단체

** 아카데미 : 서울, 대구, 전주, 창원 등 각 5회씩 전문강사 섭외하여 일반인 대상 교육 추진(6~10월)

- (창의적 인재 발굴) 대학(원)생 대상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공모 사전신청(4·6월) → 서류심사(8월) → 발표심사(9월) → 시상식(11월) → 자료집발간(12월)

- (랜드마크화) 녹색도시 우수사례 14건 및 모범도시숲 6건 선정

* 대상지조사(8월) → 서류심사(9월) → 현장점검(10월) → 인증·홍보(11월) → 자료집발간(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녹색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도시숲 정책 전환

- 양적확대에서 질적관리로의 도시숲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우리 도시·지역 여건에 맞는 3-30-300 규칙 적용 방안 마련 필요

* 現 지표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으로 '23년 기준 14.07 (WHO 권장 15.00)

** 대안 : 캐나다 벤쿠버,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는 3·30·300 규칙, 수관피복률 등 질적 지표 적용

o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가로수 관리기준 보강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및 강풍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도심 내 위험 가로수 통합관리 필요

* 지자체별 위험수목 진단조사 관리기준 상이, 예산·전문가 확보 곤란으로 현장적용 미흡

** 위험 가로수 진단조사 전국 통일 기준을 마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요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가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었으나, 관리과제 세부구성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관리과제와의 연계성이나 정책연계성이 잘 제시됨 ►목표치를 적절한 수준에서 상향 조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하	►지방소도시 연계 확대 등 지방소멸대응, 균형발전 등 상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 의견 수렴 필요 ►정치/경제/사회/문화(PEST)적 측면의 분석 강화가 요구됨 ►현장 방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 변경, 도시숲 효과 홍보, 시민참여 확대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다각적 홍보 실적이 매우 우수하며,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 실적이 확인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광복 80년을 맞아 무궁화로 국민통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법 제정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도시숲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대상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하	►도시숲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로수 관리 노력이 인정되나, 어떠한 갈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불명확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법 제도정비,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성과가 인정되며, 녹색도시의 누적되는 우수사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할 지에 대한 대비 필요
		상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로 의미있는 성과를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숲의 주요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부분 2020년 이전의 연구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
		매우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매우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하	►현재 진행중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녹색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 필요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8	녹색인프라 중심 수목원·정원 활성화 기반 확충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저변 확대

- 현장 실습형 전문교육 지원 및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실습보육공간 조성
- 의료분야와 정원치유 협업을 통해 사회적 처방으로 접근 계기 마련
- 동아시아 최초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성공 개최로 수목원 교육 기능 강화
- 수목원·정원 홍보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문화 확산

o 수목원·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등 법령 제·개정

- 공립수목원 등 조성예정지 지정절차 완화로 행정 소요시간 단축
- 국가정원 지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평가 검증 도입
-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 대응을 위해 품질평가단의 자격요건 및 경력기준 완화
- 수목유전자원 손실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수목원 조성면적 예외 허용

<table>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실습보육공간 조성 정원</td>
<td>'25 정원산업박람회</td>
<td>질병청 협업 정원치유</td>
<td>세계식물원교육총회</td>
</tr>
</table>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정원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등 뒷받침 필요

- 정원도시 수요 증가*로 사업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등 미흡

* 정원도시 사업 수요('30년까지) : 42개 지자체, 사업추진('25) : 8개소

☞ 정원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등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목표가 명확하고 연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대표성과 합리성을 확보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하	►수목원·정원 정책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대표성과 연계성이 확보되었으나, 성과지표1은 객관성 및 측정방식의 명확성 기준 충족이 다소 부족 ►일부 목표는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중	►SWOT 분석, 정책 간 연계(기후, 복지, 관광 등), 전문가 자문 등이 충실히 반영됨 ►대국민 인식조사 및 정원·수목원 수요조사를 정례화하고, 홍보 및 시민참여 전략과 연결된 민간참여형 정책 설계 필요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정책계획 수립·제도개선·협업 다변화 등 실질적 환류가 이루어짐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중	►지적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개선사항 관련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정원치유 제도도입을 위한 민·관·학 협력 성과가 있으나,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력 성과가 창출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부정적 보도에 대한 현명한 대응 등 실적이 확인됨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바람직하나, 현 내용만으로는 전체 의미 파악이 다소 어려움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민간중심 정원문화 확산 성과가 인정되며,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하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공동협력 노력이 인정되며, 수상실적 등 가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 필요
		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AS-IS와 TO-BE 정원지도를 작성하여 향후 기대효과를 가시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함
	3-4. 국정과제 성과 기여도(+1점)	상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지역예술인과 문화상생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인상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9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경영 안정화	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생산·유통) 임산물 재배·생산기반 및 가공·유통 지원으로 생산규모 확대

- '24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 수실류(3.4%↑)·약용식물(3.8%↑) 생산액 증가하였으며, 전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은 증가 추세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억원)** : ('23) 24,706 → ('24) 24,571 → **('25) 잠정 24,964, 1.6%↑**

o (소비촉진) 임산물 홍보·판로 지원으로 임산물 외연 확장

- 「먹거리 임산물 소비활성화 대책」 수립 및 '숲푸드' 브랜드 출범 원년으로, 우리 임산물 인지도 제고 및 소비확대 교두보 마련

▸ **'숲푸드' 브랜드 출범(2월)** : **95개 임가** 참여, **299개 품목** 등록,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매출 90억원**
▸ **「우리임산물 숲푸드 대축제(5월)」** 개최, 숲푸드 홍보·판매지원(**8만명 방문, 매출액 41백만원**)

o (역량강화) 산주·임업인 교육·정보제공 확대로 임업인 육성

- 임업경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

▸ **「대한민국 산주대회(3월)」** 개최(45년만 개최, **4,000명 참여**, **산주·임업인 긍정반응 93%**)
▸ **「제6회 임업인의 날 기념식(11월)」** 개최(350명 참여, 정부포상 전수식 등 **임업인 자긍심 고취**)

- 청년임업인·전문임업인 대상 교육·정보제공으로 임업인 적극 육성

▸ **전문임업인 육성(명, 누계)** : ('24) 27,933 → **('25) 잠정 28,988, 3.8%↑**

o (복구지원) 임산물 재해피해 예방·복구지원으로 안정적 임업경영 환경 조성

- 임산물 재해보험 홍보 및 개선을 통한 가입규모 확대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규모(임가수, 가입금액)** : ('24) 18,568개 임가, 가입금액 4,318억원 → **('25.10월) 19,329 임가, 가입금액 4,880억원**

- 영남권 초대형산불 등 재해복구지원으로 임업인의 조속한 경영 복귀 지원

▸ **영남권 초대형산불 복구지원** : **2,524임가**(피해면적 1,467ha) 대상 농약대·대파대 등 지원, 송이채취임가 별도지원(**송이대체작물조성 163억원, 특별위로금 24억원 등**)

o **(수급안정) 임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질서 확립**

- 설·추석 등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시행 및 임산물 유통 합동단속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질서 확립

▸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시범운영 : 전국 8개 권역, **명예감시원 13명 위촉·운영**
▸ **산림청(공무원+민간 명예감시원)-농관원 임산물 합동단속** : 원산지 표시 **계도·홍보 등 184건**

o **(제도개선) 임업인 지원 확대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사유림경영 촉진 및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임업진흥법」 개정 발의

▸ **「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상정**(9월, 의안번호 제2212040호)
* 스마트임업, 사유림종합계획 수립, 임산물 소비활성화 및 품질관리 법적 근거 마련 등

- 임업의 특수성과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임업세제 개선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600 → 3,000만원**
*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7월)」 반영, '26.1.1부터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성과지표 2개 중 1개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설정된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경쟁력과 경영안정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o 또한,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제시된 협업사례 중 일부는 실질적인 협업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E"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

- 정책자금 접수처와 사업장 간 거리 제한*으로 정책수요자 불편 발생

*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산림조합에 신청

- 정책자금 대상자 기준과 자격 요건 불일치로 중도회수 사례 발생

*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전문임업인이면서 5년 이상 산림경영 경력이 필요하나, 정책자금(임야매입자금)의 경우 전문임업인이기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음(단, 1년 이내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선·보완 방안)** 임업인,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 검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조하여 **현장의견 수렴,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고 구성이 적절함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 재해복구 지원 등 6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구성하는 등 적절하게 설계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중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총액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표 도출이 요구됨 ►성과지표2의 경우, 5년 평균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통계,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계획 수립 및 정책에 반영함 ►전체적으로 분석-기획-반영 간의 흐름이 잘 구성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 결과,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반영사항을 적절하게 작성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착·반영하여 비과세 한도 확대와 집행률 제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산주대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사례는 협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농산품질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권한을 결합한 시너지가 창출되었음이 인정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예상치 못한 산불과 굴취 사건에 적기에 대응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위법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한 성과를 거둠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97.2%	►성과지표1의 목표치를 100% 달성 ►성과지표2의 목표치를 95% 미만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여러 측면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의 해석과 의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됨
		상	►다양한 성과가 인정되며, 세제개선과 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다만, “임업인의 날 개최”, “세재개선 추진”보다는 “임산물브랜드 활성화”, “산림경영 소득증대를 위한 비과세한도 확대” 등 성과 지향적인 보고서 기술이 필요함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2030년까지 임가경제, 임산업, 임업경영 환경 부문에서 성과가 기대되나 해당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0	임업직불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혜 확대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지표(달성) >

① **임업직불금 지급률(88%)** : '25년 직불금 지급면적 / 지급대상 경영체 등록면적

② **임업직불금 수혜율(51%)** : '25년 직불금 지급등록자 / '25년 직불금 신청자

o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임업직불금 최대 지급(516억원)**

- 직불금 신청·접수기간 연장(1→2개월) 및 온라인 신청 확대 등을 통한 전년대비 직불금 2.5%(+13억원) 확대로 제도 시행 이래 최대 지급

* 임업직불금 지급액(억원) : ('22) 469 → ('23) 489 → ('24) 503 → ('25) 516

➠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통한 임업직불금 적기 지급 및 수혜 확대**
*** 임가소득 증가** : ('24) **임가당 253만원**→ ('25) **임가당 262만원(3.6% 증)**

o **예산 증액 및 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최근 3년간 직불금 신청·지급 추세치 반영 '26년 추가예산 확보(15억원)
- 현행 재량 지출사업에서 의무 지출사업으로 예산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중장기 재원 운용·관리 지원

➠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한 예산 증액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수혜 확대 기대**

o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임산물생산업 지급 대상 품목(차나무 추가) 확대(고시 개정, '25.10)
- 산주 작성 시 항공사진 활용 등 경영계획 작성기준 완화(예규 개정, '25.8)
-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고시 제정, '25.8)

➠ **임업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혜 확대 기반 구축**

o **임업직불제 소통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반영**

- 산불피해지 임업경영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기간 동안 산림경영 기준, 업종 전환, 판매 증명 등 완화(산불특별법 제정, '25.10)
- 육림업 직불금 필수서류인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 벌채 등 '모든 산림사업을 반영'해야 했으나 사업목적·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외' 가능토록 개선(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25.12)

➠ **임업직불금의 문턱을 낮추고** 열린 행정으로 **임업인 중심의 편의성 강화**

o **임업직불제 디지털 행정 강화를 통한 임업인 편의 증진**

-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통합관리 가능한 원스톱 행정 확대
- 농·림·어업 직불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지급 검증 강화
- 일지작성 편의 개선 및 이행점검 현장조사 앱 서비스 제공 등 행정 간소화

➠ **양방향**(임업인·행정기관) **운영체계 안정화**를 통한 **직불금 지급 심사 효율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대응

- 선택형 직불제, 소득기준 완화 및 임업경영체 미등록 임업인 구제를 위한 임업직불제법 개정(의원 발의)* 추진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선택형 직불제(7.24), 미등록 임업인 구제(7.23) 및 소득기준 완화(8.21) 국회 발의

☞ 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및 재정당국 지속 협의

- 임업직불금 단가인상(농업수준) 및 주업요건(거주지 제한, 경영면적, 판매실적 등)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협의 지연

☞ 개정 비용, 필요성 등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당국 협의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임가 소득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제도개선 목적이 명확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가 관리관제와 잘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됨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하	►PEST분석, 미시분석을 통한 SWOT분석의 정교화 과정이 요구됨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구체적이지 않음 ►일부 보완과제는 여전히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의 이행이 기대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 국회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설명회, 정책형성분야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환류함 ►목표치 조정이나, 수혜자 자격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반영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분야별 개선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이행하고 성과관리까지 연계하였으며, 홍보실적도 확인되어 전반적인 우수성이 인정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조금 중복 수령을 억제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제도 구체화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점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며 농관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둠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산불 등 돌발상황에 대해 서비스 장애 대응과 피해 관련 신청 지원을 병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한 성과가 인정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품목·지역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임업인 수혜율을 높여 국민 체감도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중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의 경우, 제시된 성과들은 바람직하나, 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며 직불금 확대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들을 발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미흡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미흡"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 효과는 향후 기대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 계획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1	임산물 수출 확대 및 통상대응 강화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신규판로 발굴 및 신시장 개척

- 다품목 통합마케팅을 통한 일본·미국 시장 공동개척(14개사)

⇒ 품목 연합(2~3개)으로 수출상담화팝업스토어 판매 등을 통해 2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 (식품) 일본·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4개국) 국제박람회에 수출유망기업(11개) 참가를 통해 바이어 발굴 지원
- (목재) 시드니 박람회(호주)에서 한국 목재제품의 우수한 품질 시연 및 홍보(바이어와 후속 상담 중)

⇒ 식품·목제품 수출기업 박람회 홍보관 운영 지원으로 250만달러 신규 수출계약 성사

o (해외 인지도 확산) 글로벌 홍보·판촉 전략을 통한 임산물 인지도 확산

- 현지 인플루언서(UAE, 중국 등) 활용 파급력 있는 홍보·마케팅(4회)으로 K-임산물 글로벌 소비층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신뢰도 강화
- 중미·동남아 현지 재외공관을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상담회 운영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연계 국제 수출입상담회(6월), '인니 산림협력센터' 연계 K-Food 소비자 체험 행사(6월)

- 지역축제(보은대추)와 연계한 베트남 바이어 초청 및 간담회·산지견학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10만달러 현장 수출계약 체결
- 일본, 홍콩 등 주요국가별 현지 홍보행사 및 해외판촉(14회) 추진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150만달러 수출성과 달성

o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준비-해외시장 정착까지 全주기 밀착 지원

- 수출유망기업 발굴(5개사) 및 초보기업 수출컨설팅(거래제안서 개발, 해외시장 조사 등 9개사), SNS 마케팅 실습교육 등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수출 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및 현지화 지원(7개사)
- 바이어 발굴부터 홍보·판촉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14개사)
-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의 대응을 위해 원재료 구매 정책자금(융자금 100억원), 수출보험(4천만원), 수출검역(8천만원) 등 지원으로 기업 부담 경감

o **(수출 활로 개척)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총력대응으로 수출 활로 개척**

- (검역) 대추 생과(베트남), 감(중국) 협상 타결 추진('25.11.1)
- (통관) 감 미국 통관을 위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기초연구 추진
- (지재권) 베트남 내 한국산 둔갑 대추 유통근절을 위한 위조방지 QR 제작, 위·모방품 단속 강화 협조 요청(외교부) 등 대응체계 마련

o **(통상협상)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 상대국 특성을 고려한 FTA 통상협상 대응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의 교역 기반 확대 및 민감한 국내산업에 대해 적극 보호

  * 신규 : 말련('25.10, 타결), 태국('25.3,6,9), 방글라데시('25.8), 세르비아('25.12)

- 미국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업계·관계부처 협력 강화

  * 한미관세 협상타결('25.10.29)로 상호관세15%, 목재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확보

- 덤핑방지관세 등 관세 수단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 산림분야 경제안보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o **(합법목재) 합법목재 교역 촉진 및 신규 무역장벽 대응**

- 합법목재 교역을 통한 원활한 수출환경 조성
- EU 산림전용방지법 대응 및 수출업계 지원
- 2025 APEC 고위관리회의 계기 합법목재교역 국제협력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수출기업 지속 발굴·육성을 위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 필요**

- **신규 수출국 진출**을 위해 바이어 발굴, 패키지 현지화, 통관·관세 대응,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준비가 요구되나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해외 안테나숍*** 시범 운영으로 **해외 판로개척** 및 **소비자 마켓테스트**

* 임산물 판로 개척과 소비자 반응 조사 등을 위한 홍보·판매 거점 매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고 구성이 적절함 ►전략목표-성과목표-과제 간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 충족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관리과제와의 연계성 및 타당성 적절함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되며, 성과지표2의 경우 측정산식 3가지 요소들의 중요성·효과에 따라 가중치 설정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수립 및 정책에 반영함 ►현장방문,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전년도 평가 결과와 국회 등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정책을 수립함 ►신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역량강화 컨설팅 및 평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수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및 수출대상국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미국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임산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을 통해 목재제품 최혜국 대우 적용은 매우 우수한 성과임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박람회, 수출컨설팅,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확대 지원
		상	►성과지표 외 수출역량 강화, 수출장벽 해소,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선제적 노력 등 우수한 성과로 판단됨
		미흡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미흡"
	3-3 향후 기대효과 (5점)	하	►K-임산물로의 도약이 기대되나, 향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2	목재이용 활성화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목조건축) 미래건축 트렌드인 탄소중립·국민건강 목조건축 활성화

- 공공분야 목조건축 확산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확대

  * '친환경 목조전망대', '목조건축 실연' 등 전국에 랜드마크 조성 확대(신규 12개소)

- 목조건축 표준품셈(안)* 제작 및 법제화 연구로 목조건축 발전 지원

  * 매스팀버 구조 목조건축의 공종·공법 등에 따른 표준 비용을 명시하여 진입장벽 완화

-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으로 목조건축 전주기 자문 제공 및 목조건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소속·산하 신규건축물 목조화 지원

  * 산·학·연 등 목조건축 전문가 32인 구성(6월) / ** 조성 전 심의 과정을 거쳐 기획·설계 등 자문 제공

- 중앙·지방·민간을 연결하여 산불피해목 '공급·생산·이용 체계' 구축

  * 공공부문 목조화·목질화사업의 경북지역 산불피해목 이용 합의(~'26년, 92.6㎥)

o (목재이용) 목재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 확산

- 다양한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배포로 홍보 효과 증진

  * 콘텐츠 : (숏폼) 한木, 언박싱 (카드뉴스) 목재로 동네 한바퀴, 그루한컷, 알쓸신목 등

- 국산목재 국민참여 체험 기회 확대, 일상 속 목재이용 관련 공모전 추진

  *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14천여점), 한木디자인 공모전(42점), 생활속목재이용 공모전(60점) 등

- 지역 목재문화 축제 개최, 국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지역확산

  * 산림청 목재문화페스티벌(6월, 서울), 춘천우드페스타(11월, 춘천), 목재누리 페스티벌(11월, 영암) 등

  ** 목공체험 확대를 위한 도심형 국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1개소, 국립 최초, 어린이 목공체험관)

- 산불피해목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산불피해목 활용사례 등 홍보자료 배포(5월) 및 '목재문화페스티벌 조형물' 제작(6월)

- APEC 정상회의에 산불피해목 가구를 활용하여 국민인식 개선 도모

  * 산림청, 합판보드협회, ㈜코아스 협력으로 산불피해목(298.8㎥) 책상, 의자 142점 보급

o **(목재유통) 국산목재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 국립목재집하장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원목 선별 공급

  * 국유림 수확 원목(낙엽송, 1,700㎥)을 대·중·소경재 선별 매각 → 수요자 인터뷰 만족감 표시

- 목재유통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업 및 국민체감형 디지털서비스 제공

  * 목재정보서비스(한木꾸러미) 데이터 기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대상(한木) 자동 표출

- 산불피해목 적극 활용을 위해 수요(가공업체)-공급(피해지) 연결

  * 목재정보서비스(NEW한木 알림마당)를 통해 지역별 산불피해목 생산 현황 및 담당자 정보 공유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안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확대 추진으로 지역 기반 공급 강화

  * 현황 : '25 기준 6개소(운영 5개소, 조성 1개소), 산불피해지역 등 대상으로 확대조성 계획

- 난방용 목재펠릿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및 동절기 펠릿 수급대책 마련

-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 지원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으로 민생 적기 지원

  * 사업 당년도에 각 지자체 개별 공고 → 사업 전년도에 산림청 주관 통합공고 추진

- 산불피해목 범위 제한하는 원목규격고시 개정(2월)으로 원재료 경합 완화

o **(임도관리) 산림 순환경영 기반 조성 및 산림재난 대응 체계 강화**

- 추경 포함 정부지원액으로 산림 분야 필수 인프라인 임도 개설(890km) 추진

  * 산림자원 순환경영, 대형산불 확산 방지, 산불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한 임도 확충

- 임도타당성평가 강화, 배수구 기준 확대 및 사면안정해석 신규 도입(4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 필요성은 높아지나,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9.6%('24년 기준)로 최근 10년간 15~19%인 실정

-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등 필요

-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확대 등 정책 고려

o 목재산업계 어려움 심화에 따른 다각적 지원과 상생발전 방안 마련

- 국산 목재제품의 가격 경쟁력 문제, 산업계 침체 국면 극복 필요

- 목재 생산, 가공·유통, 단계적 이용, 인식 개선 등 전단계 총괄적 고려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하	►관리과제 목표는 명확하나, 추진 일정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함 ►목재이용활성화는 건설경기에 적접적 연관이 있어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보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하	►자체적인 일부 성과중심의 노력보다는 전국민적 목재 우선구매을 위한 독려와 노력지표로의 대체가 요구됨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측정기준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고 내용이 탁월 ►분석-계획-실행 간의 연계 구조가 명확하고 이해관계자 수렴 방식도 다층적이며, 특히 공공 부문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제도화 노력은 정책설계의 강점으로 판단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중	►자체평가와 국정감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민감한 언론보도에 대한 과학적 대응이 필요함 ►전년도 평가결과를 일부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지표 개선이나 구조적 환류는 다소 미흡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사유림 토지 수용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요구에는 대응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산불피해목 및 국산목재 활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외에 어떤 부처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방식,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노력이 확인됨 ►제기된 문제의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생활속의 목재이용 활성화 및 인식 제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상	►성과지표 이외의 영역인 바이오매스 활용성 제고와 산림재난 대응 부문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확인됨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에 따라 설정된 수요, 산업, 인력 분야에서의 성과가 향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3	산림분야 R&D 실용화 확대	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기초·응용분야[고유연구], 개발분야[출연연구] 산림 기술공백을 매우기 위해 '산림현안 해결형 R&D' 예산 적기 확보**

- (예산증액) ▲산림현안해결,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계, ▲임산업계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으로, '25년(1,525억원) 대비 8% 증가한 1,650억원 확보

  * 농림분야 예산 증액 평균 상회: 농림분야 9.3%, 농진청 7.8%, 산림청 8.2%

- (신규사업) ▲산림 기능성 소재 양산화, ▲산림 국유특허, 타산업 이종특허 결합, ▲AI 기반 임도 설계·관리를 골자로 한 신규사업(3건*) 확보(95억원)

  *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12억),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가치사슬(57.5억), △AI 기반 임도 설계유지관리(25억)

- (추경사업) '25년 산청·경북 대형산불 이후, 산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관련 R&D 추진

  * (사업명)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25년 117억원, 11개 과제)

o **(혁신제품) 산림과학 R&D 성과물 중 공공성,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 대상 조달청 협업을 통해 '산림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운영**

- (한계) 우수 R&D 시제품 개발과 별개로, ▲영세한 기업의 마케팅 한계, ▲제품 성능 입증 기반 빈약, ▲공공기관의 까다로운 계약 절차 등으로 양산화에 실패하여 임업현장 도입에 실패 및 사장되는 경우 빈번

- (해결)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에 제품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수의계약 허용에 따른 판매 루트 지원 등 성장 사다리 역할(산림청-조달청 협업)

  * (우수사례) 수의계약 기반 원클릭 혁신조달(148톤)로, '25년 대형산불로부터 국가재산(세계유산, 국립공원, 주거지역 등)과 국민생명 보호 성공

o **(시범구매) 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으로 K-산불지연제 성과 확산**

- 대형산불 대응 R&D로 발굴한 K-산불지연제의 높은 성능, 합리적인 가격, 친환경성 기능을 해외로 홍보 및 신규 판로 확대를 위해 협업 추진

* 산림분야는 최초 협업 대상이 아니였으나, 산불대응 중요성 & 국제공조 논리로 설득
⇨ (성과) 캄보디아 및 파라과이 대상 산불지연제 68톤, 고체진화제 100개 수출 성공

o **(재정사업) 현장 사용 중인 산불진화차량의 국산화 및 신속한 성능 개선을 위해, 과기부-행안부 협업으로 긴급대응 R&D 추진**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환경부 특별법에 따라, 소형 경유 산불진화차를 대체하기 위한 공동 연구 추진('22~'24년) 및 '국산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개발 성공 → 산림청 재정사업 연계로 현장 도입 완료*

* (1차) 재정사업(60억) 투자로 다목적 차량 16대 도입 → 추경 등 추가 재원 마련(180억)으로 48대 추가 도입 完

- (중계급수 대형 산불진화차량) ▲적은 담수용량(3,500ℓ), ▲높은 구매·유지보수 금액, ▲부품수급 한계 등 수입산 진화차(유니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량 물탱크(6,000ℓ)를 탑재한 대형 진화차량 국산화 R&D 공동 발주 完('25~'27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관리과제 세부 구성(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며,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은 확인되나 그에 따른 홍보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o 또한, 국민체감 성과로 제시된 내용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발굴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E"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산림 분야별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타분야 특허 결합, ▲산림 기능성 원료 발굴·양산화 등 파급효과가 큰 R&D 과제 지속 발굴·기획

- 산림과학기술 R&D 신규사업 발전방향 및 핵심 트렌드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기술 수요 조사 실시

o 국정과제 및 12대 전략기술분야를 고려하여, AI를 활용한 R&D 과제 확대

- 고령화, 수작업 등 임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AI형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방식을 규격·체계화하여 완성도 높은 R&D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나 관리과제 세부 구성(추진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다소 부족 ►탄소중립, 고령화, 지역소멸위기를 연계할 고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 측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혁신성을 인정받는 제품을 선정하는 등 대표성 및 합리성 요건을 충족함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국내외 정책·시장 분석, SWOT 분석, 현장 수요 조사, 간담회 등을 종합 반영함 ►실행계획과 정책 설계의 연계성이 탁월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전년도 평가 결과와 국회 등 지적(개선)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정책을 수립함 ►민간 협의체 운영과 연계한 환류 방식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형 환류 체계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하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홍보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정확한 문제의식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협업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실용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음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현장 수요 확대와 평가체계 확대는 당면 현안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용화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바람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하	►국민체감 성과로 제시된 내용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과제의 발굴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적인 국민체감 성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
		상	►예산 추가 확보와 호라이즌 참여는 성과지표 외 성과로서 가시성과 충분성이 모두 인정됨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향후 기술이전·기술료 및 혁신제품 수 부문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4	지역과 연계한 산림일자리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F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산림을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자립) 현장소통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현장 진단 강화로 담당자와의 소통 채널 확대 실시(경영체별 연 1회 → 2회)

  * 그루경영체 상품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베드(42건), 지역축제 등 홍보부스 지원(36건)

- (법인화) 그루경영체 요구에 맞춘 창업 및 자립 역량강화 육성 지원

  * 그루경영체(누적) : ('18~'25) 458개, 법인등록(누적) : ('24) 312개 → ('25) 317개

- (네트워크) 주제별, 대상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공동체 연대 기회 마련

  * 산림레포츠 분야 워크숍(5.30),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6.25), 정원분야 워크숍(8.21)

o 청년 산림일자리 연계와 역량강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합 지원하는 '청년 산림인 성장 생태계 조성'

- (정보) 인터넷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취업 관련 최신정보 및 컨설팅 제공하여 지역 간 접근 격차를 줄이는 등 지역 불균형 해소

  * 메타버스 박람회 참여자수 : ('23) 783명 → ('24) 748명 → ('25) 865명

- (역량강화)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분야 신기술, 전문특화 교육, 실습 등 현장 실행력 강화(20개 기관, 311명 수료)

  * (운영시간) 프로그램별 30시간, (교육기관) 대학(산학협력단) 8개, 협단체 2개, 법인(기업) 10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창업 프로그램 운영	
분 야	기업 수(구분)	분 야	기업 수(구분)
ICT 첨단기술 실습	2(대학2)	창업 기초(일반)	2(법인2)
자격증·취업 연계	4(대학1,협회1,법인2)	가공·마케팅	2(대학1,법인1)
현장 실무	4(대학3,법인1)	창업 실무경험(직무)	6(대학1,단체1,법인4)

- (마중물) 청년 창업자 대상 산림창업 진입장벽 완화 및 도약 지원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16개 기업, 10~30백만원/개)

  * (후속지원) 마중물 1~2기 창업기업 (26개소)에 기술·회계·법무 등 필요 전문가 1:1멘토링

청년 산림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마중물 2기) 총 매출 전년 대비 42.7% 증가 * 전체 참여기업(16개) 총 매출액 ('24.12) 6,983백만원 → ('25.10) 9,966백만원

- (네트워크) 창업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청년 창업가 시너지 캠프 운영을 통해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 공유('25.9.9~10, 대전)

o **현장중심 안전보건 정책 추진으로 산림사업장 중대재해 "제로"**

※ 산림청 산림사업 사망자 현황 : ('23년) 5 → ('24년) 1 → ('25년) 0명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으로 안전조치 정립('25.2월)

  * 고위험사업장(벌채, 병해충) 대상 안전보건 비용 현실화(2.07→3.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으로 산림 안전비용 현실화('25.3월)

- 산림사업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25.10월)

- 소규모 산림사업장 대상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456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추진일정 준수율이 90%에 그쳤으며, 협업성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요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F"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지역주민 주도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후속사업 발굴

-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 인재 육성

  * (내용) 창업보육매니저를 통한 예비창업팀 발굴 및 사회적경제 육성(도약·성장)

o 벌목작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입목매각·처분 조건 강화, 노동부 협업을 통한 사업장 안전관리 등

  * 임업기계장비 우선 활용, 안전사고 취약시기 합동점검, 특별교육 대상에 벌목 포함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지역소멸 대응, 안전문화 정착 등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전략목표와의 정합성도 확보되어 있음 ►관리과제 세부 구성이 적절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중	►과제 목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측정 및 자료 출처도 명확하나, 안정적 대표성에는 한계를 나타냄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PEST 분석, 수요자 조사,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현장 중심 접근을 제도화하고 있음 ►내부역량 분석결과 약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 제시 필요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체평가 및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지표 개선, 수혜자 확대, 후속 대응 등 전반적 환류 체계가 충실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9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90%
		하	►안전보건컨설팅 대상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확인되나, 실질적인 확대 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채널 운영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하	►그루경영체 협업과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확보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 접근방안 등의 노력이 없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음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하	►현안 대응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요 현안제시, 갈등요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하	►실질적 정책성과가 확인되나, 그루경영체 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균형있게 제시할 필요
		상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체계적인 성과로 평가됨 ►다만, 대부분 지속 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지속적이며 다방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그룹과 산림·임업 우수기업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5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 구축 및 산지 규제개선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민생소통을 통한 제도 정비로 국민 이용 수요 충족 및 산지 재해예방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하여 표고, 경사도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20%까지 완화 가능('25.1.)

  * (당초) 표고 50% 미만,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균 150% 이하
    (개선) 표고 60% 미만,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입목축적 해당 시·군 평균 180% 이하

-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하며,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편입 가능하도록 기준 정비('25.3.)

- 산지 내 가축방목 시 수목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에 한하여만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가축 종류 대폭 축소('25.7.)

  * (당초) 축산법상 모든 가축 52종에 대하여 보호시설 설치 의무
    (개선) 수목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말, 면양 등 7종에 한하여만 보호시설 설치

o 산지보전·이용수요를 고려한 산지관리로 산림의 공익가치 극대화

-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작성 기준, 산지특성 평가 방법, 보전산지 지정해제 기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 타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방법과 산지현황 조사를 위한 6개 분야 31개 지표 마련

  * 산지 현황(6), 산지이용실태(10), 산지경관특성(4), 생태계·재해방지 분포 현황(2), 지역·지구 지정 현황(2), 산지이용 수요(7) 지표 조정

- 산지의 계획적 이용 및 국토·경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 도시·군기본계획(속초 등 6개 시·군), 도시·군관리계획(부산 등 8개 시·군), 자연공원(금정산 등 13개 공원), 공원녹지기본계획(원주 등 2개 시), 개발특구(울산 등 7개 특구)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산지의 개발 수요 대응

  *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개발목적의 산지분야 협의(40건)

o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태양광·토석채취 허가지 점검 강화**

- 태양광·풍력 등 허가지 재해취약 여부 및 복구기준 이행 여부 점검
-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점검표를 기반으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수행 및 대상지 기초자료(사업계획서 및 인허가 공간 등) 수집·구축
-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 복구용 표토 등)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을 기준으로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저감계획 수립

o **현장여건을 고려한 석재산업 분야 지원정책으로 석재산업 활성화**

- 석재산업 표준개발 체계 구축 및 석재 KS 개발업무를 위한 석재 전문위원회 신설(기존 산업통상부 콘크리트전문위원회에서 분리, '26.1~)
-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환경을 개선

* 지역별 개소수: 강원(3), 인천(1), 경남(16), 경기(5), 충남(5), 전남(1), 전북(7), 경북(6)

- 석재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석재산업 전반의 기본데이터 구축 및 유용한 석재자원의 발굴을 위해 석재자원 분포조사* 수행 및 도면 제작

* 2차년도('25) 조사권역(경남권) 48개 암종, 7,712㎢ 대상으로 본조사 실시 완료

o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운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 전국 산지관리 기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산지정보시스템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 교육
- 민원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등 AI 사전 확인 및 법령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챗봇 서비스 개발
- 인허가 신청·신고 제출 서류 중 실측도에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을 등록하도록 개정되어 제출가이드 제작·배포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필요

- '24년 수납률은 75.2%이며, 최근 5년간 수납률은 75~80% 수준

* '25년 국정감사 지적

☞ 수납률 제고를 위해 미수납 채권 집중관리, 시스템·제도 개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의 목표가 연계성이 높으며 명확함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 높음. 다만, 산지관리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지표 설계 필요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중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함 ►산지 특성과 개발 수요 간 지역별 차이 분석은 다소 미흡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환류 항목이 정책 추진 과정과 정합성을 이루며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에서 체계적 환류 구조를 갖추었다고 판단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전년도 평가결과를 개선 및 반영하였으나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활동과 기존대비 차별성에 대한 파악은 다소 모호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농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향후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모니터링 할 필요)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규제완화가 제한적임 ►현안의 이슈 발신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제시 필요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하	►정량적·정성적 성과가 부족하며, 현재 제시한 성과가 금년도 성과인지, 누적인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상	►AI 챗봇 도입을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은 매우 긍정적이나, 답변 정확도 및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환류 체계 마련 필요 ►산e랑 시스템 사용으로 정보성·편의성이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인 파악 필요
		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기존의 정책효과를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적·행정적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산림경영 및 사회여건 고려, 규제완화 중심이며 보호·보전 이슈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음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6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및 이용 기반 강화	B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산림분야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보호구역 관리 인프라 강화

- 산림보호구역 3,368ha 지정 및 OECM 4,470ha KDPA 등재
-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에 대한 재정당국 협의 완료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기반 강화

*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협약사업 지원, 산림생태 가치가 높은 사찰림의 실태조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이행사항 점검, 역량강화 교육, 대국민 홍보 등

o 산림생물종 보전·이용 관련 현안 대응 및 가치 증진

-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활용 협의체 운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 보호수의 문화적 가치 홍보를 위한 '2025 올해의 나무' 선발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중장기 모니터링 추진

* 가후변화 취약식물종 보전·적응, 산림습원 보전,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등

o 산림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산림생태계 보호

- 불법 산림훼손 예방·단속을 위해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 추진

* 불법임산물 채취(4월),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7월), 산림 내 불법 야영 등(11월) 단속 등

-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감시단* 참여로 산림보호활동 강화

* 국유림 보호협약(746개 마을, 1.8만명) 및 숲사랑지도원(2.1만명) 등 민간감시단 지원

o 산림생명자원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산림생명산업 활성화 도모

- 신품종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국유품종 상시처분으로 임업인 등 편익 증진

* 공고횟수: (종전) 2회 → (개선) 4회, 계약기간: (종전) 공고별 2개월 이내 → (개선) 연중

- 산림 종자·균류·식물정유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무상 분양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보호수 수종 식별 및 표기 오류 문제 발생

o 토지이용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준 개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관리과제의 구성과 일정 수립이 적절함 ▸SMART 분석 및 2단계 지표 검증을 통해 목표의 질적 수준을 확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대표성 및 합리성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지표2의 경우 자체적 관리절차에 의해 측정되므로 객관성 다소 부족 ▸목표치 적극성은 확보되었으나, 2번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정책효과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세부 내용에 대해 정책에 반영되었음 ▸특히, 가리왕산 갈등조정 등은 구체적 성과로 평가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중	▸자체 점검 및 외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체계를 조정한 노력은 확인되나, 후속 성과 분석 및 제도화 실적에 대한 서술은 다소 미흡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협의 이외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 필요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하	▸현장점검 횟수에 비해 반영 실적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 반영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대응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7년 동안 가리왕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성과는 협업과 갈등해결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산림 내 불법야영에 대한 언론과 국감지적에 따른 대응이 합리적이나, 불법에 대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성과 모두 국민체감 성과가 높으나, 사후대응 노력 이전에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정책추진이 요구됨
		상	▸산림OECM의 대규모 지정과 신규 대상지 발굴, 산림유전자원 확대는 매우 바람직해 보이나, 부처 간 협동하여 보호지역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할 필요
		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7	핵심생태축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산림복원	C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산림복원 및 백두대간 보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업무추진 실적, 업무 확대 및 미래 수요 등을 인정받아 '부서 존속' 조기 확정

* ('21) 산림생태복원과 신설 → ('23) 1차 평가(2년 연장) → ('25) 2차 평가(3차 평가대상 제외)

o 체계적인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으로 대외적 성과 제고

-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자생식물 공급을 통한 피해지 복원 등 일련의 과정*이 법-제도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실행

* 실태조사 → 타당성평가 → 복원 실행 → 사후 모니터링(10년) → 유지관리

- 국제기구의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례 우수성 인정

【 제2회 세계 복원 대회(WRF) 우수사례 선정 】

◈ 주　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 결　과 : 전 세계 94건의 생태복원 사례 중 **상위 10건 우수사례로 선정(국내 유일)**
◈ 사례명 : 보호구역 대형 산불피해지 생태적 복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평　가 : UN 생태계 복원 비전과 부합, 다양한 관계자 참여, 법·제도적 기반 등

o 백두대간 가치의 인식 확산과 중·장기 관리기반 마련

- 국회의원, 환경단체 등 참여 심포지엄(8월) 및 20대 명소 선정·홍보

* 백두대간 옛문헌, 고지도, 설화 등 인문가치와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명소 선정 및 책자 발간

- 지역주민, 대학생 및 탐방객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사랑운동' 개최(11월)

국회심포지엄

백두대간 명소(소백산)

백두대간 사랑운동(전북 남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 참여 TF 운영, 前 차기 기본계획 성과 분석을 반영한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26~'35)' 수립

* (TF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국가유산청, 학계, 시민단체 등

o **권역별 자생식물 종자 공급기반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최초 목구조 자생식물 온실(강원 평창) 조성 및 공급 안정화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연 20만본 생산 및 복원소재 공급

- 사립수목원, 종묘생산업자 등 민간대행 생산으로 지역상생 기반 마련

  * 민간대행 실적 : ('24~'25) 9개 종묘생산업자, 323백만원

- 재배기술 민간 확산, 지역협의체 등 자생식물 산업화 기반 마련

  * 대행생산자 재배기술 지도(18회), 자생식물 재배관리 가이드북 발간 등

- 자생식물 국내산 인증을 위한 유전자 기반 기술개발 확대

  * 자생식물 인증 마커 개발(누계) : ('24) 7 → ('25) 15종

o **우수 복원기술 확산 및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현장 업무 지원**

- 산림복원 기술대전 20주년 기념 Best of Best 선정 및 성과 보고

  * 75기관의 산림복원 사례(114개)를 서류·심사 및 대국민 투표로 최종 우수사례 선정(5개소)

-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체계' 수립,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등 추진

  * 복원 개념 혼용 등 현장 애로사항 개선, 산림복원 사업에 부합하는 설계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전국단위 산림생태계 환경 변화 조사 체계 고도화 필요

- 현행 생태연구 중심의 학술 조사는 백두대간 산림자원 현황 등 기초 정보 활용도가 부족하여 정책 환류에 한계

  * (조사내용) 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훼손지 현황, 주민지원 현황, 관리방안 등

-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산림생태조사의 전문 분야별 관리체계 부재

  * (조사분야) 식생조사, 곤충 및 동물조사, 공간정보 구축, 개화·결실 조사 등

☞ 조사 방법 및 데이터 고도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고 구성이 적절하나, 과제명이 포괄적 개념 중심으로 실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추후 개선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중	►관리과제와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이나, 향후 질적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도입 검토 필요 ►도전적인 목표치를 반영하였으나, 실적 변동성이 커 설득력있는 설명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산불피해, 복원기술, 자생식물 확보 등 정책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고, SWOT 기반 전략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다층적으로 반영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적 점검 결과 기반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자체 환류체계가 잘 구축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중	►TGBS 시범운영, 관군 협력을 통한 DMZ 복원 사업과 홍보실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효과와 홍보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타부처 협업을 통한 고산침엽수종 보전 등 성과가 인정되며 전국적·지속적 확산을 위한 환류와 수정계획이 요구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부정보도에 대한 적기대응, 산불피해지 복원갈등 관련 사전예방과 갈등해소 노력이 인정되며, 전주기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접근이 요구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통계자료 기반의 경제·사회·환경적 정책성과 등 국민체감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복원사업 후보지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하	►외부수상, 규제개선 등의 성과가 있으며 가시적 성과의 확대 방안을 보다 고려할 필요
		매우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매우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산림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 강화 방향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밑그림을 그렸으며, 생태복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큰 그림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TNFD의 확산에 따라 생태복원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과 정책을 확대하기 바람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8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등 조성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기반 마련

- (예산증액) 예산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및 유관기관 공동대응을 통해 '26년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878억원) 결정 및 원활한 공사 추진

  * 기재부 심의(1차 373억 → 2차 622억 → 3차 878억), '25년 240억 → '26년 878억

- (기반구축)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168억원) 결정 및 설치·공급 시기 확정(상수: '26.6월, 하수: '27.2월)

- (연구성과) 수목원 예정지 내 수목생육 모니터링, 적합수종 발굴, 염분용탈기간 연구를 통한 생육 우수 수종 25종 발굴

o 지역소멸대응 및 지역상생 방안을 위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

- (사업추진) 총사업비 심의를 통한 예산 증액(1,473억원→1,815억원) 및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한 효율적인 설계·시공 추진 기반 마련

- (목재활용) 목조건축물 집성재 및 경량목재 국산 난대수종(편백)으로 변경과 건축방식 변경(철콘→철콘+목구조 하이브리드)을 통한 목조건축 및 국산목재 사용 확대

  * (목재량) 780㎥(국산 380, 수입 400) → 1,074㎥(국산) * 증 294㎥(37.7%)

- (거버넌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상호 협력방안 마련

o 국립 생태숲 지정 및 국립 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법령개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6.4.)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원 및 체계적 관리·연구·교육·체험을 위한 국립 생태숲 지정 및 국립

산림생태원 조성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개정사항: 생태숲 및 산림생태원 관련 사업 시행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

- (생태숲 지정) 국립 울진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과 사업부지 및 주변 산불피해지(47.6ha)에 대한 최초의 국립 생태숲 지정('25.8.12.)

* 최초의 국립 산림생태원으로 '22년 울진지역 및 '25년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지 내 국가차원의 산불관련 연구·교육·전시·체험 거점 시설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우려 및 지역업체 계약비율 제고 필요

- '26년 예산 요구액 1,205억원 중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나, '25년 예산(240억원) 대비 '26년 266% 증액된 878억원 정부 예산 반영

* 기재부 심사(1차 373억원 → 2차 622억원 → 3차 878억원)

- 지역업체, 자재, 인력 등을 통한 전북 파급효과는 총 441억원이며, 향후 공정에 지역기업의 하도급 비율을 확대할 예정임

* 공동도급 146억, 하도급 23억, 자재 180억, 장비 37억, 인력 55억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기후·식생대별 수목원 조성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과제로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이 높음 ►관리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일정 작성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정책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절하나, 수목원조성에 따른 이용률 및 파급효과 등 정성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목표치의 도전성이 인정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기후변화와 새만금 개발의 불확실성 등 외부 여건을 PEST 및 SWOT 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진단함 ►지역협력과 자문기반 구축 등 현장중심 반영노력이 우수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국회 및 예결위 설득 등 후속 대응 노력이 인정됨 ►환류 내용이 단일 문제 중심이며,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부족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8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80%(다만,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됨을 일부 고려함)
		상	►지적사항의 반영이 확인되며, 홍보실적이 매우 우수 ►다양한 기관협력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구축된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 추진과 점검이 요구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하	►신규진입도로 개설, 산림생태원 목구조 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실적이 확인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중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공사 지연 방지 노력이 인정되며, 상수공급을 적기에 실현한 노력도 인정됨 ►국립완도난대수목원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 협의 노력 필요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과정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국민체감 효과가 인정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법 개발이 필요
		상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의 경우, 네트워크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우수하나 전문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우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매우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향후 경제적·사회적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 기대효과의 지속성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19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F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 및** 대통령·국무총리 **산불진화 통합훈련(2회)**
☞ **산불예산 확충('25년 2,614억원 → 추경 4,246억원 → '26년안 3,876억원, 48.3%↑)**
☞ **전문산불진화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산불특수진화대 +60명,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o **중앙사고수습본부 산림청장 운영으로 기간 내 171건의 산불 대응**

- (3.23.～30.)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15회)
- (3.26.～28.) 산불 확산에 따른 '산불현장 지휘지원단' 파견(5명)
- (3.29.～4.27.) 산림청 공무원 전직원 주말 기동단속 실시(5주)
- (6.3. 24:00)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해제(전국)

o **(정책개선) ❶국가가용자원 총동원, ❷강력한 초동진화, ❸중수본 중심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 마련**

- 진화자원 통합운용을 위한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용규정」 마련
  * 산불발생 시 유관기관 헬기를 초기에 투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실무회의 6회)
- 유관기관과 산불진화를 협력을 위한 산불진화 통합훈련 실시
  * 민·관·군 통합훈련(10.22, 공주, 국무총리), 관·군 통합훈련(11.6, 산림항공본부, 대통령)
- 최대 순간풍속 적용한 산불확산예측으로 대피범위 설정한 관계부처 합동 「초고속 산불 대피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마련
  * 행안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 **(예방활동) 산불원인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 예방·예측활동 강화**

- 불법소각 차단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
  * 부산물처리 개선농진청, 단속 및 홍보 강화산림청·지자체
- 산림인접 시설물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공간 조성 및 소화시설 설치
  * (안전공간) '24년, 151 → 174개소, (소화시설) '24년, 246 → '25년 258개소

- 산불감시 CCTV 확충 및 AI 기반 ICT플랫폼 구축하여 신속한 산불 대응

  * (ICT 플랫폼) AI딥러닝을 통해 CCTV영상 실시간 분석 → 산불여부 자동통보

o **(대응역량) 산불진화자원·인력 확충으로 산불 초기 진화 강화**

- 산악지형 특성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높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도입 확대

  * 다목적 산불진화차 : ('25) 16대 → ('25추경) 48대 → ('26) 12대

- 산림청 헬기보강 및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광학·열화상 카메라 장착

  * (헬기보강) 8대(대형 4, 중형 4)신규, 국외임차 5대(중형 5), (광학·열화상카메라) 2대신규

- 공중특수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전문 산불 진화인력을 확충

  * 공중진화대 : ('25) 104명 → ('26) 114명(+10) * '26년 정기직제 반영(행안부)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25) 435명→ ('25추경) 495명(+60) → ('26) 555명(+60명)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

산불진화 통합훈련('25.10월)

다목적산불진화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2개의 성과지표 중 1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의견수렴 절차 및 정책환류의 구조가 미흡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잠재 장애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다소 부족하여 "F"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산불 발생 시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대응체계 개선

-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 단축 및 산불대응 단계 축소

  * 대응단계 축소 : (현행) 초기+확산 3단계 → (개선) 초기+확산 2단계

o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자원 추가 확보

- 영남 대형산불 당시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등 진화자원 부족

- 공중·특수진화대 등 주·야간 산불진화에 특화된 정예 진화인력 부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산불 대응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도입 및 대응력 강화 목적이 명확하며 전략목표와 정합적임 ►'과학기술 기반' 내용은 상대적으로 구체성 다소 부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중	►실질적인 대응력이나 조기 진압 성과와 같은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기존 실적 대비 도전적 지표이나, 기상이변 등 외생변수에 따라 편차 발생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하	►정책 수립 전 시민단체, 산림 전문가, 지역주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서상 체계화할 필요 ►PEST 분석등이 요구되며,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은 주로 '지시사항 대응' 중심으로 정당성 보완 여지 있음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하	►환류내용이 '문제 대응형'에 머무르고 장기성과 환류 구조는 일부 미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환류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량적 검증은 다소 미흡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하	►상반기 점검 후 개선·지적사항-개선-홍보의 전후 비교가 필요하며, 홍보는 '실시'보다는 도달 및 전환이 핵심이 되어야 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등산앱 연계 등 실적이 확인되며, 협업 성과는 단순 실시 여부보다는 시너지의 정량화(위험의 노출 수 감소, 행동변화 등)로 보강되어야 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하	►국민여론 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잠재 장애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사항은 확인이 어려움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79.4%	►성과지표1의 목표치를 100% 달성 ►성과지표2의 목표치를 85% 미만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목표한 정책에 대한 성과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함(국민체감으로 연계될 효과 뒷받침 필요)
		상	►공중진화대 신설 확충 등 조직·인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인정되며, 장비확충 숫자 외 초동진화 시간 단축, 야간진화 커버리지 같은 효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
		우수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우수"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다소 부족함
	3-4. 국정과제 성과 기여도(+1점)	상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0	산사태재난 예방·대비·대응 강화	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법률제정)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공포로 산림재난관리 기반 강화

-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 확대(산림+산림연접지역)로 재난안전망 강화

  * (산불) 산림+산림으로부터 100m, (산사태) 산림+산림연접토지, (병해충) 산림+그 외 지역의 수목

-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에 대한 산림재난위험성 검토로 위험지역 관리 강화

  *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산림재난위험성을 검토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기관에 통보

- 복구사업 추진 시 소유자 등의 동의 갈음 절차 및 강제복구 근거 마련

  * 소유자 등이 거소불명일 경우 30일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

  ** 피해지가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동의 없이 복구 가능

o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사업(4.15~8.29)으로 안전주권 확보

- 국가 중심의 재난 예방·대응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대응

  * 전국 150건 접수 → 현장확인을 거쳐 내년 사업대상지로 85건 최종 선정

o (이상기후대응) 이상기후에 대비한 사업방식 변경 및 설계기준 강화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예산 3천억 시대 달성(^{산림청}11%, ^{재난예산}6%)

- 단독댐 위주의 사업에서 계통적·유역완결형 사방사업(^{저사공간}2,500m^3 → 11,800m^3) 추진 예산 확보 및 사방댐 설계기준 강화로 방재성능 확대

  *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 ('25) 28개소(237억원) → ('26) 138개소(1,202억원)

  ** 설계기준 강화 : (기존)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 (개선) 최근 5년 극한호우 반영

- 다목적사방댐 안전관리 방안 및 산사태 대피소 입지표준 마련

o (부처협업) 산림인접 야영장 산사태 등 위험정보 제공체계 구축, 경주국립공원 예방사업 완료 및 산사태 등 발생 모니터링체계 구축

- '고캠핑' 누리집에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링크 연계('25.8)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국 등록야영장 관리시스템(www.gocamping.or.kr)

  ** 전국 지자체 야영장 담당자에게 계정 발급 및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25.11)

- 경주국립공원(석굴암 배후사면 등) 예방사업 완료 및 감시시스템 설치

  * (예방사업) 사방댐 4개소, 산지사방 6개소 등 / (모니터링)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3개소

- 대형산불피해지역 긴급조사 및 응급복구 대상지 선별(279개소) 등 지자체 복구지원

o **(중장기계획) 기후재난 등에 대비한 선제적 대형 산림재난방지 계획 수립**

- 「땅밀림 피해·우려지 관리계획('25~'30)」, 「해안사방 조성·관리 계획('25~'30)」, 「다목적사방댐 안전관리 계획」,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운영 기준」 수립

* 연평균 지진(규모 2.0이상) 발생 건수 : ('05~'14) 52.7건 → ('15~'24) 113

o **(위기관리) '25.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 총력**

- 2차 피해 우려지 긴급진단(6,466개소, 3.28~4.19) 및 응급조치 우기 전 완료

* 산불피해목 등 긴급제거(3,946그루), 식생마대쌓기 등 응급복구(476개소)

- 산불피해 상황을 반영하여 산사태위험등급 등 예측시스템 긴급조정

* 산불피해지역 산사태위험 1,2등급 비율 : 경북, 경남 13%p, 울산 2%p 증가('25.5)

** 과거사례 분석하여 산사태예측정보 기준(임계토양함수량) 하향 조정('25.6)

o **(교육·훈련) 교육방식 개선 및 콘텐츠 개발로 교육 수혜자 확대 및 효과 증진, 주민참여 재난대비 훈련기간(4.21~5.23) 운영**

* (교육방식) 주입식 → 체험+토론형 / (설문만족도) 46% → 91 / (수혜자) 2,923명 → 11,202

** (훈련) 대피훈련 실시 마을에서 산사태 발생 → 발생 전 대피 완료(경남 산청 상지마을, 인명피해 없음)

*** (콘텐츠)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25.1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성과지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목표 설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o 또한, 전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행여부와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검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미흡하여 "E"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문제점)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주민대피 실시하고 있으나, 대피시점, 대피조력자 지정 등 구체화·표준화 필요

- 재난업무는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인사이동이 많으며, 신규자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계획이 필요

o (개선방안) 구체적인 대피계획 수립의 법제(의무)화 및 상황판단회의 지원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 산림청은 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 → 시·군·구에서 대피계획 수립

- 담당자의 주민대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기반 확대

- 권역별 순회교육,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하고, 수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 콘텐츠 보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성과·전략목표와의 명확한 연계 및 구성의 체계성과 시의성이 우수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하	►적시발령의 '적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정성적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 ►사방사업 실적률에 대한 목표 설정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해 보완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중	►10년간 통계 기반 피해 분석, 기후변화 대응, SWOT 및 제도개선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됨 ►분석 결과와 대응 전략이 정량화된 정책 리스크관리 체계로 환원되지 않아, 전략적 타당성과 자원 배분의 최적화 측면에서는 보완 여지가 있음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하	►기초·실태조사 확대, 사방사업 예산 강화 등 환류 조치가 충실하나, 제도개선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토가 동반되지 않음 ►국민체감형 개선방안 및 정량적 환류지표 연계는 다소 부족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명시하였으며,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 ►'지적-개선조치-성과-홍보'로 재구성 필요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관련기관(부처)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견 대립 수준이 복잡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회의 개최 등 협업 노력도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부족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국민여론 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갈등 예방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므로 갈등해소 요건의 사전 모니터링-예방-해소 사례가 추가될 필요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중	►사방댐 사전대피, 사전 긴급 복구 등 정책효과의 근거 제시가 우수함. 다만 국민 인식 체감도를 증빙할 만한 자료 보강 필요
		중	►법 제정 공표 및 제도기반 강화, 예산·사업규모 확대 등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가 제시되었으며, 피해예방은 사실적 확인이 다소 어려운 영역이므로 산사태 발생 시나리오 대비 피해회피 사례 추가 필요
		미흡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미흡"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전문보고서, 여론조사, 언론보도 등 긍정적 정책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재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1	산림병해충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F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가용자원 최대 확보*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역대 최대 예찰·방제****

* (예산) 재해대책비 719억원 등 1,772억원 신속 배정(1월)
(인력) 피해 극심지(포항), APEC 개최지(경주) 등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 국유림 영림단 52개단(350명) 투입

** 448만ha(전 산림의 70%) 예찰, 감염우려목 포함 261만 그루 방제

o **소나무재선충병 반복·집단발생지 수종전환 방제* 및 제도개선****

* (효과) 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목재자원 활용 및 비용 절감(단목방제 대비 90%↓)

** (방제지침 개정, 6월) 매개충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지역별 방제 기간을 1~2개월 확대

o **외래·돌발 병해충 유·출입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농림지 동시발생 및 외래·돌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계부처 협업

* 제주권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회),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공동예찰 및 협업방제, 환경부 소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발생 예측 분석·방제기술 지원

o **수목진료전문가 양성 및 수목진료 실행기반 강화**

- 양성교육·국가시험을 통한 수목진료전문가 체계적 양성 지속('25년 812명 배출)
-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단속 강화(9,879개소 계도·단속)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추진일정 준수율이 94.1%에 그치며, 2개의 성과지표 중 1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o 정책환류에 대한 홍보실적이 부재하고 외생변수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증가로 국민체감 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F" 등급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이상고온 등 재선충병 발생 위험 증가 및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방안 전환 및 효과적 대응** 필요

- 유기적·효과적 방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방제전략('26~'30)** 수립

* 국가방제벨트 구축, 국가 역할 및 협력 강화, 피해목 활용, 국민 참여 방제, 항공 및 친환경 방제, 내병성 품종 연구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고, 예찰·진단·방제까지 체계가 일관됨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성과지표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높으나, 실질적인 피해 저감효과 등 결과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기존 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병해충 트렌드 분석, 원인 진단, 현장 방문 기반의 정책 수립, ICT 기술 활용 등 정책환경 반영이 우수함 ►각종 소나무재선충과 산림병해충에 대한 통계 및 사례분석,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함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나무의사 시험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예찰장비 고도화 등 전년도 평가 및 지적사항에 대해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환류 이행이 확인됨 ►나무의사 제도 실효성과 병해충 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 환류 필요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94.12%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94.12%
		상	►전년도 평가 및 언론, 국회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홍보실적은 부재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중	►다기관·민간 협업이 존재하며 노력도도 우수하나, 협업성과는 민원감소, 방제오해 해소, 공동예찰 범위 확대, 대응시간 단축 등으로 정량화할 필요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국민여론 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한 것으로 확인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96.6%	►성과지표1의 목표치를 95% 미만 달성 ►성과지표2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하	►피해경감 조치, 이동규제 완화 등 불편해소 측면의 성과가 인정되나, 외생변수로 인한 총 피해증가가 커 국민체감 효과 발생은 한계가 있음
		중	►광역예찰, AI·분석 표준화 제도 개선 등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나무의사·병원 확대 등 대외성과가 큼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중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여론조사, 통계자료 등)를 제시함 ►공원, 아파트 등 생활권 단위 병해충 방제 노력을 향후 지표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2	사람·평화·상생번영을 중심으로 국제산림협력 증진	A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전 세계 산불 이슈에 주도권 확립을 위한 재난관리 협력 강화

- (산림재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글로벌·아시아 산불협력 주도 등 글로벌 현안을 반영한 산림정책교류

  * (FAO) 산림청은 통합적 산림재난 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글로벌 산불 통계' 공유를 위한 집단지성 멤버로 한국 참여('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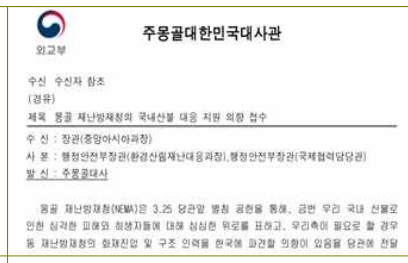
  * (AFoCO) 프랑스와 협력하여 산불관리체계 교류, 아시아 산불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3회) 및 본사업 출범식 실시('25.10)

- (국가연대) 국내 대형산불로 위기 시, 7개국에서 위로 및 지원 의향 전달

  * 인적·물적 지원 의향 및 위로서한을 통해 산림분야 신뢰관계 구축 및 공조체제 강화

통합산림위험관리 발표

한-프-AFoCO 사업출범식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몽골 재난방재청의 국내산불 대응 지원 의향 접수

수 신 : 장관(중앙아시아과장)

사 본 : 행정안전부장관(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행정안전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

발 신 : 주몽골대사

몽골 재난방재청(NEMA)은 3.25 당관앞 발청 공한을 통해, 금번 우리 국내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희생자들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우리측이 필요로 할 경우 동 재난방재청의 화재진압 및 구조 인력을 한국에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당관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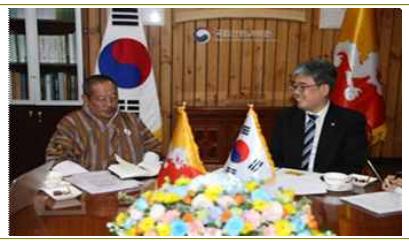
몽골대사관 인력지원 서한

o 경색된 외교관계를 '산림'이라는 해법으로 모색하여 양자협력 내실화

- 고위급 양자(부탄, 베트남, DR콩고), 제8차 한·중·일 산림국장 회의(9월), 협력위원회(호주, 우즈벡, 캐나다) 등 산림정책 현안 논의로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

  * 고위급 산림정책 현안 논의로 REDD+ 부지확보·맹그로브 수종 도입(베트남), 산불협력(DR콩고), 지속가능한 목재·산림재난(한·중·일) 등 실용외교 성과 달성

한중일 산림국장회의



한-부탄 양자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고위급 회의

o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로 산림외교 및 대국민 참여·홍보로 인지도 제고**

- (세계 산림의 날) '산림과 식량'주제로 식량안보·기후위기에 산림의 중요성 인식 및 17개국 외교관계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국제행사 실시(3.21)
-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국회와 함께 '청소년 영어발표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가뭄 이슈에 국제적인 해법, 청소년 역할을 논의(6.17)
- IFSA(국제산림전공생연합)는 국제 산림전공 대학생들의 최대 규모 네트워크 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지원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 (6월, 8일간)

세계 산림의 날(3.21)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6.17)

IFSA 지역회의(6.29~7.6)

o **국제기구와(CBD, UNCCD) 워크숍·포럼 개최로 국제산림이니셔티브 확산**

- (산림생태계이니셔티브) CBD와의 10년간 이행성과 홍보, 28개국 원주민 참여로 산림복원을 통한 지역경제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공유(8월)
- (평화산림복원) PFI 국제포럼에 18개국 초청으로 분쟁 취약국 2곳(중앙아·보스니아)의 MOU체결로 숲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행동에 한국이 중심 역할(9월)

산림생태계복원 국제워크숍

평화산림복원 국제포럼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내 산림정책 현안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추진 필요

- 초대형 산불 빈번화에 따른 대응 강화, 목재산업활성화 등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산림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전략목표와 연계됨 ►교류·소통·양성 등 과제 구성 요소 간의 체계적 연계나 단계적 추진 구조는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하	►관리과제의 연계성 및 타당성은 적절하나, 측정방식의 명확성 및 객관성은 다소 미흡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반영하였고, SWOT분석으로 전략을 수립함 ►정책사례 분석과 전략적 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산림협력 활동에 관한 소통과 홍보 활성화 노력이 돋보임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기타 외부 지적사항이나 내부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 환류체계의 제도화 필요 ►국회 지정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교류 대상을 개도국에 한정하여 추진을 검토)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93.3%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93.3%(다만,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지연됨을 일부 고려함)
		상	►지적 및 제안사항을 잘 반영하여 이행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한-프랑스-AFoCo 3자 협력이라는 점과 프랑스 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협업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ODA 예산 삭감이 된 상황에서 AFoCo 예산 규모 증액을 위한 대응 노력과 실제 예산 반영은 매우 우수한 성과이며, 글로벌 동향분석 및 정보제공은 향후 관련 현안 발생 시 적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다양한 정책 대상자(전문가, 학계, 학생, 일반국민 등)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통해 이들이 정책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상	►한중일 산림국장회의, 고위급 양자회담 등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가 돋보임
		보통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보통”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올해 추진한 여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함
	3-4. 국정과제 성과 기여도(+1점)	상	►글로벌 재난 지원으로 외교에 기여, 향후 외교성과를 통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실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외 산림협력 추진	D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산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다변화 및 융합화 추진

- (사업 규모) 수원국 여건을 고려한 산림 ODA 사업 추진 계속
  * 예산: ('07) 12 → ('14) 106 → ('21) 168 → ('23) 196 → ('24) 269 → ('25) 265억원
  * 건수: ('07) 4 → ('14) 11 → ('21) 19 → ('23) 26 → ('24) 29 → ('25) 29건
- (다변화) 산림 개발협력 대상 지역 및 수원국 확대 추진
  *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중앙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융합화) 산림복원 이외에도 산림재난관리, 주민소득, 산림복지 등 MDGs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융합형 ODA 사업 추진
  * (몽골) 사막화방지 조림 + 산불피해지 복원·예방 + 혼농임업
  *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조림 + 경제수종 조림 + 혼농임업 + 도시정원
  * (중미3국) 산불피해지 복원 + 혼농임업 + 주민역량 강화
  * (베트남) 맹그로브 훼손지 복원(재해예방) + 주민소득(양봉)

o ODA 사업 조기 준공으로 우수 산림정책 모델의 해외 전파·확산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한-캄 자연휴양림 개장
  * (사업규모) 48억원, (기간) '21년~'25년, (사업지역) 캄보디아 씨엠립
  * 산림과 관광을 융합한 에코투어리즘 기반마련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 선진화된 산불재난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니 산불재난관리센터 준공
  * (사업규모) 44억원, (기간) '22년~'26년, (사업지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 ICT 기반 산불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지휘체계 마련(상황실, 전시실, 강의실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ODA 사업의 전략성·효율성 확보

- 국익 중심의 전략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ODA 사업 추진

o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지원 저조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 융자 가능 산림투자사업 다양화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중	►관리과제 목표가 명확하고 구성이 적절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리과제와 직접적인 연계성 논리 확보가 필요함 ►전년대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정책분석 및 의견수렴 활동이 직접적인 정책 기획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 실질적 제도 설계 노력이 주목할만함 ►이해관계자 요구분석이 우수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하	►환류내용이 정책설계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논리체계가 다소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제시 필요 ►국회,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 청취가 필요하며,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 다소 추상적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하	►파라과이 공공기관 시범조림 사업지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조치계획을 도출하였으나, 조치계획에 지속성 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타지키스탄 한국형 도시정원 조성사업은 한-중앙아시아 산림협력 사업의 주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신한은행과의 협약체결 등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캄보디아, 몽골 사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 문제점을 신속히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ODA 사업 특성상 국민체감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하	►성과지표 외 가시적 성과가 일부 인정되나, 성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성과의 정책적 합의를 강조하기 바람
		미흡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미흡"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산림 ODA,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등을 통해서 향후 경제적·외교적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실현이라는 효과 역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24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여건 조성	B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o **(사업이행) 라오스 준국가 수준 대규모 사업 본격 추진**

- MRV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산림자원조사교육 진행('25.8)
- 퐁살리 현지 여건 변화를 감안한 전략적 이행계획(SIP) 수립 추진('25.10)

o **(사업발굴)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보를 위한 사업 후보지 발굴**

- 온두라스와 국가 단위 REDD+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 '25.1)를 체결하여 사업 부지확보 및 본 타당상조사 실시
-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25.9)와 베트남('25.8)에 대규모 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LoA) 체결

o **(민간지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지원 강화**

- REDD+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진행
- 민간의 사업참여 독려를 위한 타당성 평가 및 정부간 논의 지원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담회('25.10) 개최 및 컨설팅 제공

o **(인력양성) RED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강화**

-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및 기본 교재개발
- REDD+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동영상 및 브로셔 제작으로 소통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이전(ITMOs) 체계 구축 필요

- 파리협정, 국내·외 법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외 REDD+에서 발행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여 NDC 달성 등록까지의 과정 정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20점)	1-1. 관리과제의 적절성 (3점)	상	▸REDD+ 기반의 국외탄소흡수 사업이 산림기본계획 및 NDC 감축 목표와 명확히 연계됨 ▸사업구성(시범사업-제도정비-인력양성) 간 구조적 논리 완성도 높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7점)	상	▸관리과제와의 연계성, 대표성,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요건 모두 충족함 ▸전년대비 상향된 목표치를 제시함
	1-3. 정책환경 분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반영 노력도 (5점)	상	▸SWOT 분석 기반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명시함 ▸분석 결과가 정책수단 개발 및 제도화까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1-4. 정책환류의 충실성 (5점)	상	▸자문결과 및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 및 MOU 성과로 연계됨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 매우 우수함
2. 정책집행 (20점)	2-1. 추진계획 이행 충실성(8점)	100%	▸관리과제별 추진일정 준수율 100%
		상	▸작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REDD+ 주요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교육개발 등을 통해 우수하게 대응함
	2-2. 문제해결형 협업 노력도(7점)	상	▸최초의 국가단위 대규모 REDD+ 국제감축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REDD+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확인함
	2-3.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상	▸라오스 REDD+ 사업 관련한 현안 발생 이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임
3. 정책성과 (60점)	3-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20점)	100%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
	3-2. 종합적 정책효과 (35점)	상	▸REDD+ 사업 초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융자 신설은 기업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다만, 본 성과는 과제1에서도 주요한 성과로 언급되어 중복평가가 진행되므로 과제별 성과를 분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상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직접 REDD+ 확대, 민관 협력 소통체계 확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가시적 성과가 돋보임
		미흡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미흡”
	3-3 향후 기대효과 (5점)	상	▸REDD+ 이행의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한국형 REDD+에 대한 체계적 논리 정립이 필요함

* 정성지표 상대등급 설정 기준: “상” ≧ (평균) > “중” ≧ (평균-표준편차) > “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경제림 육성단지 내 경영 불가능 임지가 일부 포함되어 제외 필요 - 행정 과정에서 지목 변경 등을 파악하지 못해 보호구역이 경제림 육성단지로 중첩된 사례가 발견되어 일부 재편 추진('25.5월) * (기존) 394단지, 2,021천ha → (재편) 394단지, 2,020천ha, △115ha 제외 -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구획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재편 필요	o 산지구분 목적과 실질 경영가능 임지 등을 고려하여 경제림육성단지 재편('26.12월) - (제외) 공익용 산지, 보호구역, (추가편입) 단지 밖 임업용 산지 및 준보전산지 중 목재생산 여건이 좋은 임지 등 종합적 재편 - 경제림 육성단지 공간정보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1 (산림 자원과)	o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부실 사례 발생에 따른 품질 제고 필요 - 대상지 선정 부적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위반* 등 부실사례 지속 발생 →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 사업을 방제기간 이외 실행 등 - 숲가꾸기 산물 수집 강화, 산불예방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등 지침 미비사항 보완 필요	o 대상지 선정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숲가꾸기 품질 향상 도모('26.12월) - (대상지 선정)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현장자문관 시범 운영** * 공익림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범실시('26) ** 퇴직공무원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품질, 설계자문 등 현안문제 지원 - (감독 강화) 산림청↔외부기관 합동 모니터링 확대 및 부실사업 야기 산림기술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강화로 활엽수 과다 제거 * 반복 부실한 공무원 등은 기관 통보 및 부실 지자체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 삭감 - (제도개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방제기간 외 숲가꾸기 실행, 부산물 반출 시 이동제한지역 통행금지 등 지침개정 (병해충방제과 협조)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 (국유림 경영과)	o 산주의 고령화로 사유림 소유구조가 파편화되고 부재산주가 늘어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부재산주 증가추이 : ('12) 44.0% 1,105천명 → ('24) 56.0% 1,211천명 o 국가 매수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산주의 산림자산 유동성 제고를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 필요 o 산지은행제도 도입 필요성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나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법제화 및 예산 반영에 소극적인 입장임	o 임지를 구하기 어려운 산림경영 의지가 강한 귀산촌인, 임업인 등에게 산지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지거래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국회 예산 증액 요청('26.하반기) - 산지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30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지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산지 중개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28) * 산지은행 플랫폼 ISP 수립 추진('26) → 플랫폼 구축('27) → 플랫폼 운영('28~)
3 (산림 정책과-탄소)	o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강화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해야 하나, 현재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 * 현행 「탄소흡수원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 ☞ 「탄소흡수원법」 개정 등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마련, 정보 및 통계 관리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내용 신설 필요	o 탄소흡수원법 개정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법제화 추진('26.12월)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이를 반영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보 및 통계 관리, 연구개발 추진 등 *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24.12.23.) →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25.2.18.) → 의원발의 및 기후부 등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26년~)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구 -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 규모가 낮은 상황 * 현황('25p 누계) : 인증량 213,489tCO_2, 활용량 30,516tCO_2, 활용률 14.3% ☞ 탄소크레딧 민간 플랫폼과 협력 등 산림탄소흡수량 수요처 확대·발굴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회원사 및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수요 확대	o 산림탄소상쇄사업 민간 홍보 등 -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산림탄소 흡수량 활용 사례 홍보('26.1분기)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평가 기준 반영 관련 설명회('26.1분기) o 자발적 탄소시장 국제 기준을 고려한 방법론 신규 개발 -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경영 방법론 개선 관계기관 업무협의(과학원, 임진원 '26년 1분기) - 신규방법론 개발 및 산주 대상 설명회 개최('26년 상반기)
	o 지역단위 산림(공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 - 기존 탄소중립·기후적응 법정계획에 산림 부문 반영 한계가 있고, 산림 부문의 전체 상세내용 반영은 어려우므로 시·군 산림계획 제도화 필요	o 지역 단위 실효성있는 탄소흡수계획 마련을 위한 산림기본법 개정 추진('26.3월~)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림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시·군 단위 산림계획 제도화 추진
4 (산림복지 교육과)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가자격증인 산림교육전문가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교육+이론·실기평가) 시 자격을 부여 - 자격증이 남발 우려 등 외부지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이수 및 평가제도 개선 필요('24 국정감사)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교육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문제은행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6.12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5 (산림휴양치유과)	o 산촌·귀산촌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필요 - 산촌정착 및 귀산촌 교육 등의 사업 예산이 '24년 종료되어, 산촌 활력특화사업(8억원, '24~) 외 관련 예산이 부재한 상황 - 인구소멸위기 산촌의 활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 인구유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필요	o 귀임업인·귀산촌인의 법적 정의 마련 등 산촌 지원 제도 강화 - 안정적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로 법적 정의 및 지원 대상폭 확대 · '귀임업인', '귀산촌인' 정의 마련으로 정책수혜 대상 법제화 · 생활·주거안정, 임업 경영기반 조성 등 정착지원 근거 마련 * 정착지원금, 창업·주택구매 등 지원,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금 반환, 벌칙 등 - 산촌, 귀산촌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지속('26.12월)
	o 새로운 재난 유형에 따른 산림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 필요 - 현행 산림재난 대응체계, 새로운 기후재난 유형 및 특성(폭염, 집중호우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산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 주체의 의무 및 지원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o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 산사태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방안 정비,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신설 등 산림휴양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비·시행 ·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인원, 배치시간 등 기준 신설 · 이용객 대피 조치 단계 변경, '주의' 단계에서 휴양림 예약 취소 추가('26.12월)
6 (숲길등산레포츠팀)	o 국가숲길 운영·관리 제도의 내실화 추진 필요 - 「산림휴양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고 운영체계를 구체화하여 숲길 제도의 내실화 보완 ☞ (개선·보완 방안 제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숲길 권한 위임 범위 근거 마련 및 정례 소통을 통한 협의체 운영	o 국가숲길 운영·관리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을 통한 제도 체계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산림청장 → 지방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 - 관계부처 의견조회('26.1~2월) → 입법예고('26.3~4월) → 분야별 영향평가·규제심사('26.5월) → 법제처심사('26.6~7월) → 차관·국무회의('26.8월) → 공포·시행 - 국가숲길 운영·관리 중앙·지역협의체를 통한 숲길별 운영·관리 운영체계 마련 → 연 2회 운영, 6개 협의체(중앙1, 지역5)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예산에 대한 집행률 제고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차별 실집행 이월 발생으로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개선·보완 방안 제시) 주기적 집행점검 등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으로 집행률 제고	o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 사업기간·사업비 조정 등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발생 개선을 위한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25년~)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점검회의 및 주간보고를 통한 공정관리 강화('25년~) * 지자체 및 소속기관 대상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점검회의('26년 분기별) 및 주간공정보고를 통한 공정관리 및 공정률 제고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사업기간·사업비 조정)로 이월 예산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26.3월)
7 (도시숲 경관과)	o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녹색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도시숲 정책 전환 - 양적확대에서 질적관리로 도시숲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우리 도시·지역 여건에 맞는 3-30-300 규칙 적용방안 마련 필요 * 現 지표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으로 '23년 기준 14.07 (WHO 권장 15.00) ** 대안 : 캐나다 벤쿠버,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는 3·30·300 규칙, 수관 피복률 등 질적 지표 적용	o 도시숲 정책에 3-30-300 규칙 기반 정책 적용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한국산지보전협회 등 도시숲 공간 분석('26.3월) - 도시숲 수혜도 지도 작성 및 도시숲 정책 언론 브리핑('26.상반기)
	o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가로수 관리기준 보강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및 강풍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도심 내 위험 가로수 통합관리 필요 * 지자체별 위험수목 진단조사 관리기준 상이, 예산·전문가 확보 곤란으로 현장적용 미흡 ** 위험 가로수 진단조사 전국 통일 기준을 마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요구	o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가로수 관리 기준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개정('26.9월) * 생활권 내 수목 위험성 평가 진단 기준 마련 등 -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상·하반기)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8 (수목원정원 정책과)	o 정원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등 뒷받침 필요 - 정원도시 수요 증가*로 사업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등 미흡 * 정원도시 사업 수요('30년까지) : 42개 지자체, 사업추진('25) : 8개소 ☞ 정원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등 마련	o 정원도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 추진 -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발의 추진('26.12월)
9 (사유경영 소득과)	o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임업 진입장벽 완화 필요 - 정책자금 접수처와 사업장 간 거리 제한*으로 정책수요자 불편 발생 *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 사군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산림조합에 신청 - 정책자금 대상자 기준과 개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불일치로 중도회수 사례 발생 *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전문임업인이면서 5년 이상 산림경영 경력이 필요하나, 정책자금(임야매입자금)의 경우 전문임업인이기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음(단, 1년 이내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문제점)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경력 기준 충족이 1년 이내 불가하여 중도회수 대상(숲경영체험림 조성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기준 간 불일치 발생)	o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26.1월) - 사업장-접수처 간 거리 제한 완화(직선거리 30km → 직선거리 60km 이내) - '숲경영체험림' 정책자금(임야매입자금) 자격요건 개선(전문임업인+5㏊ 이상 면적+5년 이상 경영)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0 (임업 직불제팀)	o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대응 - 선택형 직접지불제, 소득기준 완화 및 경영체 미등록 임업인 구제를 위한 「임업직불제법」 개정(의원 발의 完) 추진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 선택형 직불제(7.24), 미등록 임업인 구제(7.23) 및 소득기준 완화(8.21) 국회 발의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및 재정당국 지속 협의 - 임업직불금 단가인상(농업수준) 및 주업요건(거주지 제한, 경영면적, 판매실적 등)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국가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협의 지연 ☞ 개정 비용, 필요성 등을 보완하여 재정당국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o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령 개정 대응 -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중기사업예산 및 '27년 예산 요구('26.4월~) - 임업경영체 미등록 임업인 구제 및 농업외 종합소득기준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 협의('26.4월~) 및 국회 법안심사 대응 - 농업수준의 단가인상 및 주업요건 완화 등 개선 추진을 위해 중기사업예산 및 '27년 예산 요구 및 재정당국 협의('26.4월~)
11 (임업수출 교역팀)	o 수출기업 지속 발굴·육성을 위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 마련 필요 - 신규 수출국 진출을 위해 바이어 발굴, 패키지 현지화, 통관·관세 대응,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준비가 요구되나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해외 안테나숍* 시범 운영으로 해외 판로개척 및 소비자 마켓테스트 * 임산물 판로 개척과 소비자 반응 조사 등을 위한 홍보·판매 거점 매장	o 임산물 해외 안테나숍 운영(~'26.11월) - 주요국 안테나숍에 임산물 입점·판매를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및 소비자 마켓테스트 추진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 필요성은 높아지나,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9.6%('24년 기준)로 최근 10년간 15~19%인 실정 -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등 필요 -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확대 등 정책 고려	o 국토부 등과 지속적인 협업, 연구 등을 통해 「목조건축법」 제정을 추진하여 범정부 활성화 체계 구축('26.12월) o 목조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의 목조건축화 촉진('26.6월) o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 지역 목조건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공공 목조건축 지원사업의 확대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촉진('26.12월) o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등 국산목재 활용 인체친화적 목재생활공간 조성('26.12월)
12 (목재 산업과)	o 목재산업계 어려움 심화에 따른 다각적 지원과 상생발전 방안 마련 - 국산 목재제품의 가격 경쟁력 문제, 산업계 침체 국면 극복 필요 - 목재 생산, 가공·유통, 단계적 이용, 인식 개선 등 전단계 총괄적 고려	o 국내 목재산업체 지원 및 권역별 목재산업 거점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26.12월) - 목재생산부터 가공·소비까지 집약화 및 권역단위 목재이용 모델 마련 추진 o 목재산업계 판로 개척 및 국산목재 이용 증진을 위한 '목재산업박람회' 개최('26.9월) o 국산목재 소비 촉진을 위한 목재유통 체계 개선 및 국민공감대 확산 - 국산목재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목재 확인제도 등 이력관리 강화('26.12월) - '목재이용=탄소중립'의 긍정적 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26.6월) 및 홍보 추진('26.11월) o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통 관리 강화 - 미이용 수집 현장 및 제조시설에 대한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추진('26.6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3 (산림정책과-R&D)	o 산림 분야별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타분야 특허 결합, ▲산림 기능성 원료 발굴·양산화 등 파급효과가 큰 R&D 과제 지속 발굴·기획 ☞ 산림과학기술 R&D 신규사업 발전방향 및 핵심 트렌드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기술 수요 조사 실시	o ▲산림분야 특허와 이종분야(타산업) 특허의 결합으로 혁신성을 담보한 신규 지식재산권 발굴과, ▲사업화(시제품, 양산화, 판로개척)까지 연계 가능한 신규 R&D 추진('26.5월) o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임상실험을 통한 산림자원 기능성 원료 발굴 및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과 연계한 양산화 R&D 추진('26.5월) o 기타 임산업 현안해결을 전제로 한 신규 R&D 발굴을 위해, 협단체·차세대리더 등 다양한 혁신주체 대상 수요 조사 실시('26.9월)
	o 국정과제 및 12대 전략기술분야를 고려하여, AI를 활용한 R&D 과제 확대 ☞ 고령화, 수작업 등 임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AI형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방식을 규격·체계화하여 완성도 높은 R&D 실시	o (임도) 산림순환경영 및 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AI 기반 임도 설계유지관리 자동화 R&D 추진('26.5월) o (수확) AI 기반 단기소득임산물, 수실류(밤,대추,호두) 자동 성숙도 판단·수확 및 자동 운반 R&D 추진('26.5월) o (판별) 산양삼 외형, 중량, 성분 등 기초 데이터 수집 및 품질등급 자동 예측 AI 모델 개발('26.5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4 (산림안전 보건일자리팀)	o 지역주민 중심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 필요 - 지역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일자리발전소 후속 사업 발굴 - 그루매니저(지역별 1인 배치) 역량에 따라 그루경영체 성과 편차 발생 * 그루매니저 1인당 담당 경영체 편중(5개) 및 의존도 과다 - 산림일자리발전소와 사회적경제 육성이 분리 운영되어 연계 실적 저조 * 그루경영체 발굴 458개 → 법인화 317개(69%) → 예비사회적기업 35개(8%), 사회적기업 5개(1%) ☞ (발굴)매니저 팀 운영 및 발굴·육성으로 분리 운영하던 체계를 '산림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일원화	o 산림일자리발전소 효과성 분석을 통해 사업운영 체계를 보완한 신규 창업지원 사업 발굴 - 그루매니저 역량에 따른 성과편차를 보완한 '산림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을 중기 사업예산 및 '27년 예산 요구('26.5월~)
	o 벌목작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임업분야 재해율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벌목 작업 중에 발생 - 특히, 입목매각지는 공사감독 등의 책임이 없어, 사업장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개선)입목매각·처분의 허가(계약) 조건 강화	o 벌목작업 안전사고 취약 시기(2~5월)에 노동부와 합동점검 등 추진(~'26.5월) o 입목매각·처분 시 임업기계장비 우선 활용 등의 허가 조건 신설(~'26.12월) o 노동부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에 "벌목" 포함(~'26.12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5 (산지 정책과)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필요 - '24년 수납률은 75.2%이며, 최근 5년간 수납률은 75~80% 수준('25년 국정감사 지적) ☞ 수납률 제고를 위해 미수납 채권 집중관리, 시스템·제도 개선 추진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중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미수납 채권 관리계획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및 관할청 납부독촉, 취소요청, 강제징수 등 적극적 채권관리 유도('25.12월)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에 미납자 납부독촉 메시지 발송기능 추가 및 시스템 접속 시 미납안내·경고화면 추가('26.上) - 미수납 예방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가산금 제도를 신설하여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행정조치 강화('27.下)
16 (산림환경 보호과)	o 보호수 수종 식별 및 표기 오류 문제 발생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보호수 정보(수종·본수 등)의 오류로 인해 산림청 행정통계의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o 전문가 검증을 통한 보호수 오류 정정('26년 하반기) - 수종 식별 논란이 있는 보호수 실태조사 및 오류 정정
	o 토지이용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준 개선 필요 - 산지이용 수요 점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년 마련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o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개선('26년 하반기) - 심의기준을 정량·정성적으로 구체화하여 해제사유가 명확하도록 개선 - '25년 용역 결과에 대한 지방청 및 시·도 의견 수렴 후 고시 개정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7 (산림생태복원과)	o 전국단위 산림생태계 환경 변화 조사 체계 고도화 필요 - 현행 생태연구 중심의 학술 조사는 백두대간 산림자원 현황 등 기초정보 활용도가 부족하여 정책 환류에 한계 * (조사내용) 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훼손지 현황, 주민지원 현황, 관리방안 등 -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산림생태 조사의 전문 분야별 관리 체계 부재 * (조사분야) 식생조사, 곤충 및 동물조사, 공간정보 구축, 개화·결실 조사 등 ☞ 조사 방법 및 데이터 고도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필요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방법 및 체계 개선(~'26.12월) - 조사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26.1월) * (내용) 정책 활용 가능한 조사방식 개선(안) 논의 (참석) 과학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생태원 등 - 개선사항 반영한 용역 계약 체결('26.3월) - 백두대간 관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26.12월) o 멸종위기 모니터링 산림생태조사 전문 분야별 조사 체계 개선(~'26.12월) - 조사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26.1월) * (내용) 표본점 조사 항목, 방법 등 개선(안) 논의 (참석) 국립산림과학원 - 개선사항 반영한 용역 계약 체결('26.3월) - 표본점 확대 및 분포도 구축 등 개선 ('26.12월)
18 (수목원조성사업단)	o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우려 및 지역업체 계약비율 제고 필요 ('24,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26년 예산으로 1,205억원을 요구하여 정부 예산안에 878억원을 반영시키고, 국회 심사에서 추가 증액 추진 * 기재부 심사(1차 373억원 → 2차 622억원 → 3차 878억원) - 하도급 계약은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 중으로 지역업체, 자재, 인력 등 현재까지 전북 파급효과는 총 441억원* * 공동도급 146억, 하도급 23억, 자재 180억, 장비 37억, 인력 55억원 - 향후, 공정에 지역기업의 하도급 비율을 확대할 예정	o '26년 확정된 예산 878억원에 맞춘 공정 조정을 통해 준공 지연 최소화(~'26.12월) o '26년 공정과 관련된 하도급은 기 계약된 지역기업을 활용하여 참여규모를 확대하고 잔여 하도급은 지역기업 우선 검토 (~'26.12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9 (산불 방지과)	o 산불 발생 시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대응체계 개선 -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 단축 및 산불대응 단계를 축소하여 초기에 다량의 진화자원 투입하고 국가의 빠른 개입으로 강력한 초기진화 * 산불대응 단계 축소 : (현행) 초기+확산 3단계 → (개선) 초기+확산 2단계 ** 국가 산불대응 : 재난성 대형산불 우려시 산불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 지휘	o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으로 산불대응 단계 축소 추진('26.2월) - 초기+확산 3단계 → 초기+확산 2단계 o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3~4월은 산불확인 과정 없이 최단거리 헬기부터 신속 투입하여 '신고접수~물투하'까지 골든타임 단축('26.3~4월) * ①신고접수 → [②산불확인]생략 → ③출동지시 → ④담수 → ⑤현장도착 → ⑥물투하
	o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자원 확대 필요 - 영남 대형산불 당시 산불진화헬기, 진화차량 등 진화자원 부족 - 공중·특수진화대 등 주·야간 산불진화에 특화된 정예 진화인력 부족 * 전문 진화인력(약 1만명) 중 공중(104명)·특수(495명) 등 전문 진화대는 5% 수준	o 산불진화헬기 신규도입 1대대형, 국외임차 5대중형('26.2월) o 다목적산불진화차 12대('26.12월) o 특수진화대 확충('26.7월) * 특수 : ('25下) 495명 → ('26下) 555명
20 (산사태 방지과)	o 각 지자체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주민대피 실시하고 있으나, 대피시점, 대피조력자 지정 등 구체화·표준화 필요 - 재난업무는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인사이동이 많으며, 신규자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계획이 필요 * (OO시) 산사태 예측정보에 따른 대피시점 명시, (OO시) 구체적인 대피기준 미비 ☞ 부처간 협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선제적 주민대피 강화	o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26.12월)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정보전달체계 구축, 계층별 대피계획, 단계별 대피기준 등 * 산림청은 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 → 시·군·구에서 대피계획 수립 o 담당자의 주민대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기반 확대('26.상반기) - 현장공무원 대상 산사태정보시스템 교육강화 · 권역별 순회교육,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하고, 수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 콘텐츠 보급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1 (산림병해충 방제과)	o ’22년 이후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 발생 ’22년 : 38만 → ’25년 : 149만 그루) 방제를 위한 국가 수준의 근본적 대책 필요 ☞ 국가방제전략 심포지엄(9.12.) 및 국가방제전략 국회세미나(11.10.) 등 개최하여 전문가·NGO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마련 추진(’25~’26)	o 유기적·효과적 방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방제전략(’26~’30) 수립(’26.1월) - 국가·광역방제전략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전략간 정합성 확보 * 국가·광역시도 방제전략 수립(계획기간:5년) 법제화(’26년 상반기 발의)
	o 외래·돌발병해충으로부터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필요 ☞ 산림·농지·공원 등 관리 주체별 협업방제 추진 ☞ 제주권역 외래·돌발병해충 협의체 운영 및 붉은등우단털파리 연구 추진	o 외래·돌발병해충 관련 유입차단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대 운영 - 확산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협의·공조 체계 확대 구축 * 협의체 확대 : (’25) 제주권역 → (’26) 남부권역(전라·경상권역) ** (구성) 산림청, 국립식물검역본부, 국립생태원, 지방정부, 재난공단, 학계 등 -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연구 및 방제 지원 등 협업 추진 * 친환경방제방법 발굴을 위한 야외 실증 실험 시행(~’26.4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2 (국제협력 담당관실)	o 산림복원 중심의 국제협력에 치중하여 국내 현안과 연계 부족 - 초대형 산불 빈번화에 따른 대응 강화, 산림벌채 부정인식 등 국내 산림경영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교류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필요	o 국내 산림정책 현안에 기여하도록 산림재난대응,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등 글로벌 연대 구축 예정('26.6월) - 한-프 산불 교관 태국파견으로 AFoCO 회원국 대상 교관양성프로그램을 통한 산림재난 관리역량 강화('26.1월) - 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3.21)」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목재 등 산림경영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확산으로 공감대 형성 예정('26.3월)
	o 새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른 국제협력 예산 확대에 한계 - 국내·외 무상원조 축소 여건에 따라 사업비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타 부처 기금 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o ODA 예산 지속 감소 추세로 타부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 노력('26.12월) - 외교부의 한-아프리카연합(AU) 기금 확보를 위한 초청연수 구상 제안 등 지속 노력 -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기업포럼 등 지속 지원
23 (해외자원 담당관실-산림협력)	o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ODA 사업의 전략성·효율성 확보 ☞ 수원국 요구에 따른 ODA 사업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국내 재정 효과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필요 - 국익 중심의 전략적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ODA 사업 추진	o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 국조실)을 반영한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 '26~'30 전략계획" 수립('26.상반기) o 국익 및 성과 중심 ODA 전략에 맞춘 산림분야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27년 예산 편성('26.12월) - 국내 공공기관·기업 참여 및 REDD+ 지원형 신규 ODA 사업 기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o 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저조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 ☞ '25년 융자 신청기업 감소에 따라 융자 가능한 해외산림투자 사업 다변화 검토 - NDC 국제감축 부문 500만톤 기여 및 기업 ESG 활동을 위한 REDD+ 사업 확대 추세에 따라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강구	o 해외투자기업 경영 위험 저감을 위한 정책·금융제도 도입방안 의견수렴 및 지원('26.하반기) - 기업간담회, 세미나, 현장점검 등 지속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 -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기업 정책지원 추진 o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지속 발굴·개선('26.하반기) - 융자 가능 해외산림투자 사업 다변화 추진 o 다수의 기업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사업 반영 검토('26.상반기)
24 (해외자원담당관실-국가NDC)	o NDC 달성에 활용 불가능한 REDD+ 소규모 시범사업 구조조정 필요 - (배경) 기존 REDD+ 경험축적을 위해 운영한 소규모 시범사업은 대규모 REDD+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규모화·내실화 필요 * 소규모 면적의 REDD+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 실적은 자발적 시장(VCS)에만 거래 가능하여 규제시장에 해당하는 국가NDC 달성에는 기여 불가('25.11) - (계획) 기존 소규모 REDD+ 시범사업을 민간 분야로 이양하며 NDC 달성에 활용 가능한 대규모 REDD+ 사업에 행정역량 집중	o 사업성과 분석,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분석('26.2분기) o 미얀마와 사업 방향성 협의('26.3분기) o 국가 간 협의 사항(이관·종료·규모화 등)에 따른 필요사항 조치('26.4분기)

[붙임] 2025년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산업·임업인 지원, 임업기술 연구개발, 산림문화·휴양 및 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재해 대응,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국제산림협력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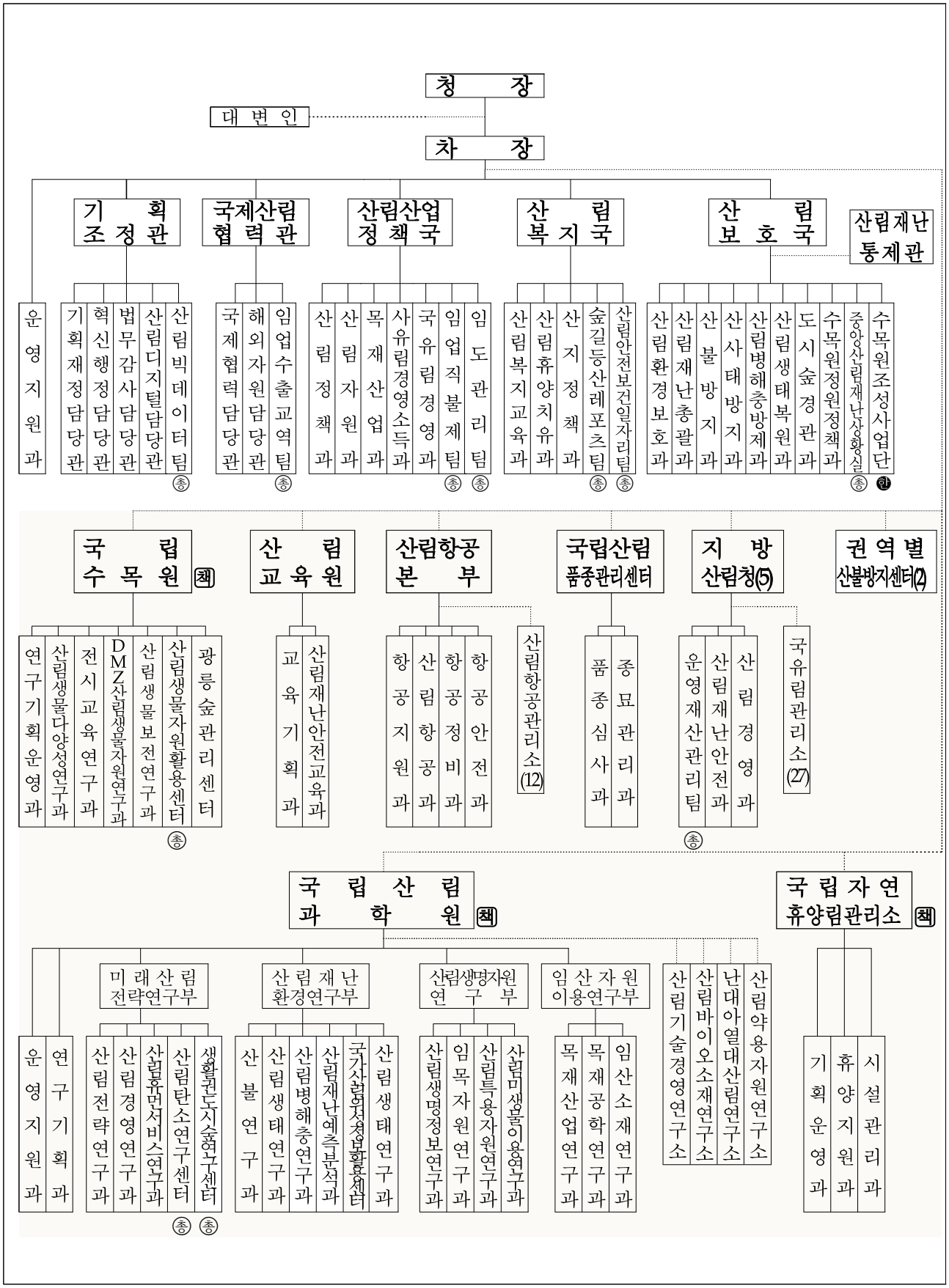
□ 핵심기능

산림자원	▪ 경제림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하여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 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제도 정비 ▪ 산림흡수원 증진 기술 및 정책 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산림산업	▪ 임업인 지원 및 임산물 유통기반 확대 ▪ 목재산업 지원 및 목재문화 확산을 통한 목재이용 촉진 ▪ 산림분야 청년 및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산림복지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산림문화·휴양 및 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생활권 내 도시숲 및 정원 등 그린인프라 확충
산림보호	▪ 산림생태계 보호·관리를 통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구축 및 산림 위법행위 근절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적극 대응
국제협력	▪ 다자 산림협력 내실화 및 맞춤형 양자협력 전략적 운영 ▪ 산림 ODA사업 효율적 추진 및 REDD+ 시범사업 내실화 ▪ 임산물 통상 협상 및 임산물 수출 시장 확대

□ 대표 성과지표 달성도

대표 성과지표	목표치('30년)	달성도('25.12월 기준)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률(%)	85.5%	87.9%
임가소득(만원)	4,500만원	3,841만원

□ 조직도



□ 임시조직(본청) : 산림정책혁신지원단

2. 전략적 목표체계

임 무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바탕으로 산림이 가진 경제 · 환경 · 사회적 기능 증진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비 전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달성 및 탄소중립 산림기반 구축	모두가 누리는 녹색공간 및 산림복지로 국민행복 실현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로 임가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보전 · 복원 강화로 국민 생명과 산림생태계 보호	글로벌 산림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로 국제사회 위상 강화
성과목표	1. 산림의 지속가능성 및 가치제고 2. 산림을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여	1.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2. 도시녹지 확충 및 일상 속 녹색문화 확산	1. 임업인 소득 향상 2. 목재이용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3. 산림 R&D 및 일자리활성화 4. 디지털 산림행정 구현으로 산림관리 고도화	1. 산림생태계 유지·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호 · 관리 2. 산림재난 예방 · 대응 · 복구 체계 고도화	1.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적 산림외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강화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I)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달성 및 탄소중립 산림기반 구축

성과지표 | **국산목재 수집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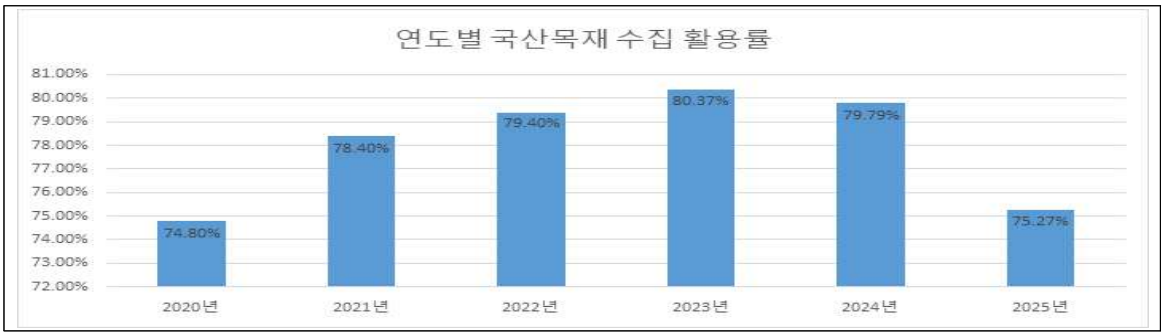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국산목재수집활용률 〉

- **개념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기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양묘, 조림) → 육성(숲가꾸기) → 이용(이용기반조성, 벌채, 수집) 등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각 단계별 유기적인 사업연계의 결과물로 산림자원분야 사업의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조사기관 : 산림청**
- **조사대상 : 국·공·사유림**
- **조사방법 : 벌채량 대비 수집량 실적보고서**
- **측정산식 : (수집활용량/국내 총 벌채량)×100**

□ '25년 측정결과

o '25년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벌채된 산불피해목 중 수집조건 등으로 미수집된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산목재 수집활용률은 전년 대비 4.5%p 하락한 75.3%를 기록하였습니다.



- 최근 산림바이오매스 및 건설경기의 여건 변화에 따라 목재수입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물 수집을 통한 자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초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목 공급 증가로 수집 활용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 실적 집계 일정이 소요되므로 지표 실적은 전년도 4분기와 당해연도 3분기까지 실적을 적용

□ 성과분석

o 목재 등 산림자원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목재생산 확대, 산림자원 육성, 산림경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목재생산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재수확 제도개선 및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산림재난에 대비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이행하였습니다.
-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경영 최적지를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편('25.5월)을 완료하고 목재생산에 집중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o **(목재수확)**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정착과 규제완화,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및 임도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① 제도 운영

- 산림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의 벌채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목재수확 위험도평가제를 도입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 (당초) 농업·임업·축산업용 연간 10㎥ → (변경) 산주·자가소비용 연간 10㎥

② 목재생산 인프라 확충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인력 목재생산 방식 한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타워야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 세트(5세트) 및 신기술 접목 기계장비(묘목드론, 무선조종 풀베기 장비 등 40대)를 도입하고 임업기계 운용 능력교육을 통해 장비 활용을 제고하였습니다.

- 전국에 임도를 약 891km를 확충하여 임도밀도를 기존 4.25m/ha에서 4.39m/ha로 향상시켰습니다.

③ 부산물 활용

- 기존에 버려지던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수집활용률을 높였으며, 특히 '23년에 신규로 반영된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예산을 '25년 12천ha로 확대하여 목재부산물을 적극 생산하였습니다.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추가 조성(5개소→6개소)으로 벌채 후 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 벌채 부산물을 적극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친환경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활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공급량: ('24) 1,427천톤 → ('25) 1,671천톤 (17.1% 증)

틸팅하베스터 운영 교육

묘목 운반용 드론 교육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진

o **(자원육성)** 가치 높은 경제수 조림(11천ha), 체계적인 숲가꾸기(142천ha)로 기후변화·산림재난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1개소), 스마트양묘시스템(5개소) 등 ICT 기반 첨단 종묘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종묘 생산성·효율성이 4배 향상되었으며 농촌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초대형 영남권 산불로 훼손된 숲의 기능 회복을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추진단을 구축하고 긴급벌채반을 신속 투입하였습니다. 예산 1,224억원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 대비 39%가 증가한 2,750ha 피해면적에 위험목 제거 등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산불 위험성이 높은 소나무류 산림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21천ha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스마트 양묘시스템(온실 내부)

스마트 양묘시스템(제어실)

o **(산림경영)** 경제림육성단지 중심 목재생산 확대를 위한 경영임지 최적화, 경영모델 구축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05년부터 지정·관리한 387개 단지, 234만ha에 대해 경영 제한림을 제외하고 실질적 경영이 가능한 394개 단지, 202만ha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하였습니다.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 목재생산 확대를 위하여 춘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목재의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목재생산·공급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민·산·관* 합동 선도단지 현장 팸투어 등을 실시하는 등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참석) 산림청, 지자체, 목재산업체(7개), 완주·무주산주 대표(7명), 산림조합(11.14.)

순천 산림경영단지(두릅 출하)

선도경영단지 팸투어

목재산업박람회 홍보

□ 향후 추진계획

o 2030년까지 국산목재 수집활용률을 80.4%까지 달성하기 위해 목재수확 인식제고 컨설팅 등을 통한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베기(수확벌채 및 수종갱신)를 확대하여 국산목재수집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o 특히, 피해목 수집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급되는 산지와 수요처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o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산림재난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임도 500km를 포함하여 총 1,005km의 임도를 신설하겠습니다.

o 임업기계 운용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민·관 합동교육의 참석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의 정기화를 통해 일반 임업인의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o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추가 조성(6→10개소)하여 산림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각 선도 산림경영단지별로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을 반영한 경영모델을 바탕으로 지역기반 목재자원의 생산·유통·소비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o 이러한 제도개선 및 사업품질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산림복지 수혜율

□ 성과지표 개요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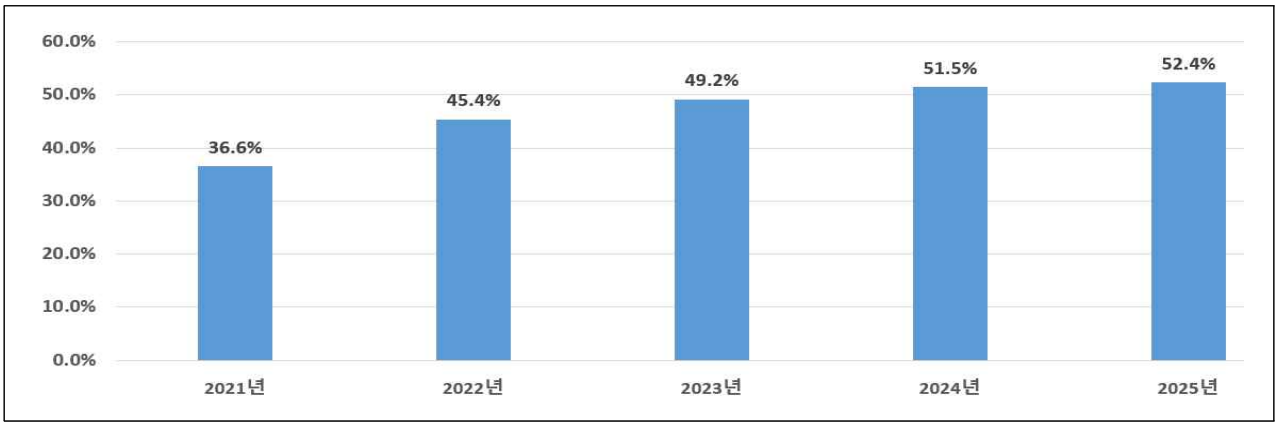
- 개념 :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숲경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은 산림복지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지표임
- 조사기관 : 산림청
- 조사대상 : 지방청, 지자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조사방법 : 산림복지서비스 각 분야별 실적보고서
- 측정산식 : (자연휴양림이용자수 + 산림교육프로그램 이용자수 +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자수 + 숲길프로그램 이용자수 + 수목장림 이용자수) / 전체 인구수

□ '25년 측정결과

o '25년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은 52.4%(2,704.4만명)으로 전년 51.5%(2,653만명)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 서비스 유형별 수혜인원을 보면 자연휴양림 이용객 2,030.8만명, 산림복지프로그램(산림교육+산림치유) 참여자는 650만명, 숲길 프로그램 이용자 16.2만명, 수목장림 이용자 7.4만명입니다.

< 산림복지 수혜율(%) >



□ 성과분석

o (산림휴양) 자연 힐링 트랜드 확산, 캠핑·야영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여가 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 국민 87.9%가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숲 등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24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쾌적한 산림휴양 체험 기회 확대

* 휴양림(4개소), 숲속야영장(4개소), 산림욕장(3개소) 신규 조성, 시설보수(150개소)

o (산림교육) 교육공간을 확충(26개소)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8월)하고 지역 교육인프라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산림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유아숲체험원 조성(31개소), 시설보수(6개소), 산림교육센터 지정(1개소)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5월) 개소 및 숲교육포털 오픈
- 늘봄학교 숲교육프로그램 ('24)초등 1학년 → ('25)2학년까지 수혜층 확대 제공
- 지역인프라 연계 숲강좌 개설로 산림교육의 평생교육 확대 여건 마련

* 사례 : 서울시민대학-숲에서 건강찾기, 서대문평생학습관-내山내돈(소득창출)

o (산림치유) 거점 산림치유시설을 신규 조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여 산림치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역 산림을 활용한 산림복지단지, 치유의숲 등 신규 조성

* 국립진안고원치유원, 문수산산림복지단지 조성(2개소) → 복합거점형 산림복지 허브로 육성
* 치유의숲 6개소 개장 → 지역민의 건강휴식 기회 확대.방문객증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

-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17개 시·도에 1개소 이상의 숲체원 조성

* ('25) 4개 시도 7개소 → ('30) 6개 시도 11개소 → (최종) 17개 시도 21개소

- IoT·웨어러블 장비 활용 등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치유 인프라 확대

* 치유시설(국립산림치유원) 내에 Iot센서.웨어러블 장비이용으로 이용자 데이터와 숲환경정보 실시간 측정 활용
* 수집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과학적 효과 검증 체계 구축

o (등산・레포츠)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등산・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 숲길 조성(618km), 숲길・등산로 정비(7,779km)로 편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코스인 동서트레일 개방(17개 구간, 244km)

  * 국립보은등산학교를 단순 교육기관에서 동서트레일 거점 숲길복합클러스터로 기능 확장

- 국가숲길 운영·관리 지침(훈령제정) 마련으로 숲길 품질 향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전국 5개 권역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산림레포츠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권역-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

  * 국립밀양등산학교 신규 개장(5월 개교) 19개 등산프로그램 운영, 3천여명 교육진행

  * 권역기반 등산학교 중심으로 지역거점 산림스포츠센터(3개소)를 연계

o (수목장림) 숲을 통한 삶과 죽음의 순환 가치와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인식 홍보를 통하여 숲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장례·추모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 수목장림을 웰다잉 공간으로 인식 전환하기 위해 다매체 홍보활동, 문화공연(13회) 등 국민공감형 인식개선 활동 추진

  * 신문.버스광고.SNS 홍보, 소식지 오디오북 제작, 국립기억의 숲 문화제 개최

- 무연고자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28건), 지역업체 연계 수목장 관리, 지역 영화제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수목장림 문화 확산 및 공영장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공영장례 지원체계(보령시, 서천군), 수목장림 홍보협력 MOU(삼신상사, 산림조합상조)

o (취약계층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로 수혜인원(2.9%) 증가 및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 바우처 수혜 인원(명) : ('22) 5만 → ('23) 6만 → ('24) 6.5만 → ('25) 7만

  * 만족도 현황(점) : ('22) 90.9 → ('23) 91.8 → ('24) 93.5 → ('25) 94.2점

- 서비스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절차 장벽 해소

  * 나눔숲(21개소), 목재인테리어(34개소), 무장애나눔길(18개소, 29km), 도시숲 무장애 환경 개선(7개소)으로 산림복지 체험 환경 확충

- 고립·은둔청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산림치유 서비스 강화

  * 자살고위험군, 감정노동자 등 대상 맞춤형 숲치유프로그램(21천명)으로 심리안정와 일상회복 기여

  * 자아존중감 61.75 → 66.5점, 우울정도 30.0점→25.19점으로 유의하게 효과 확인

- 대상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안정과 공동체 회복 촉진

  * 주거취약계층 '찾아가는 생활숲 서비스'(600명), 산림복지시설 숲속 결혼식(5쌍)

  * 치매환자 대상 휴레스토랑(300명), 학교.사회 부적응 청소년 대상 자격취득 지원(22백명) 등

□ 향후 추진계획

o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2030년까지 국민 56% 이상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목표로 산림복지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마련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다각화

- 국・공립 시설을 민간 복지전문업에 개방확대하고 교육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산림복지산업의 현장 여건 개선

- 산림복지휴양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일반인은 물론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숲체험 기회를 제공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협력 확대

성과지표 임업 국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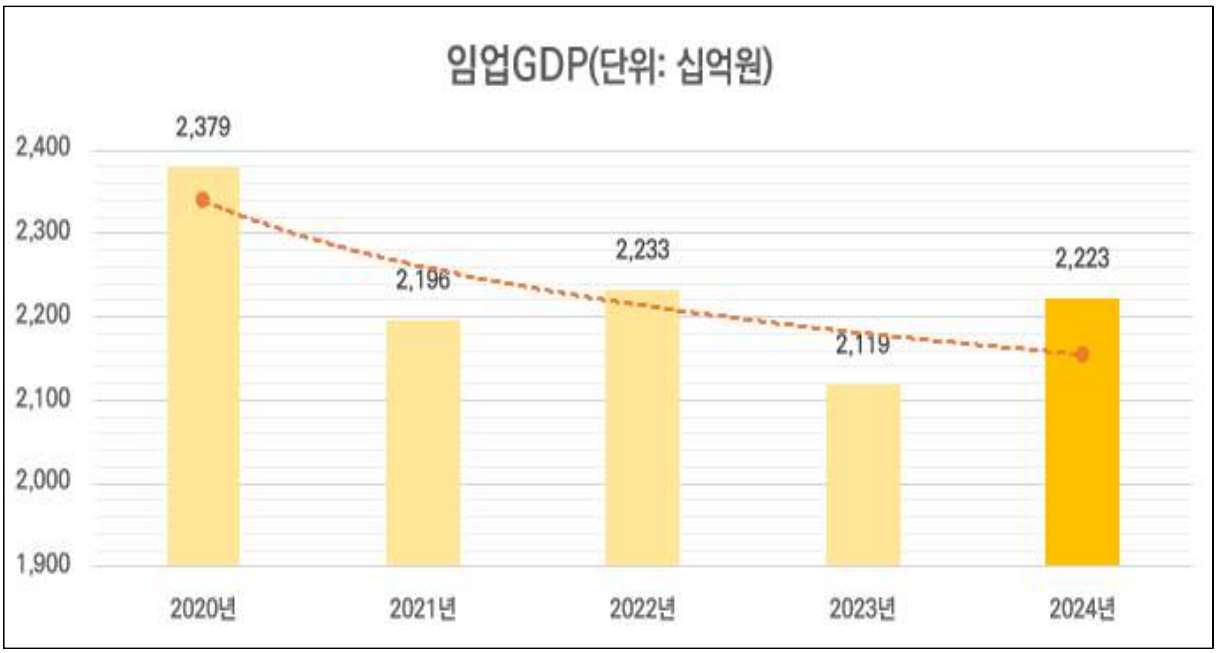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 임업 국내 총생산 〉

- 개 념 : 임업 주체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1년 동안 공급한 재화·서비스의 총 시장가액에서 중간재 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
- 조사기관 : 한국은행
- 조사대상 : 산업연관표상 임업(영림업·벌목업·채취업 등)의 부가가치
- 조사방법 : 한국은행발표자료
- 측정산식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임업 GDP(표준산업분류상 육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생산액의 총 합계)

□ '25년 측정결과

o 임업GDP는 '24년 기준 2조 2,230억원이며 연평균 1.6% 감소추세



□ 성과분석

【 대내외 환경 】

o 임업은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생산 규모가 영세하며*, 취약한 유통기반 등으로 인해 임가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목재수확 후 다시 수확하기까지 25~50년 소요 / 3ha 미만 영세 산림소유자가 86%

** '24년 기준 임가소득(3,738만원)은 농가소득(5,083만원)의 73.5%, 어가소득(5,478만원)의 68.2%

o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재해가 규모화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임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임업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임산물 재해피해(ha) : ('23) 6,397 → ('24) 1,486 → ('25) 4,145

* '25년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임산물 피해 : 총 5,501건(1,467ha), 복구액 406억원

o 또한, 임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인력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임업분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임가인구(만 명) : ('22) 21.0 → ('23) 20.4 → ('24) 20.0 / 60세 이상 고령자비율 72.4%

* 40세 미만 청년임업인(경영주, 명) : ('22) 534 → ('23) 296 → ('24) 246

【 주요 추진정책 】

o 산림청은 **임산물의 생산·유통기반 확충·개선**하고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지원**하는 등 **임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경영지원]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규모화·현대화*와 임업경영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103억), 임산물 생산기반조성(61억),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21억), 유통·가공시설 현대화(61억) 등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통한 임산물 생산기반 확대

* 전문임업인·귀산촌인 융자(1,214억원 규모, 금리1~2%, 한도 3억원/인, 최장 35년)

- [경영안정] 임산물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임산물 재해피해 복구** 등 안정적 임업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 영남권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지원 : 주요 임산물(밤·고사리 등 8품목) 복구단가 인상(현실화율 100%), 자부담·융자분을 국비 보조로 전환, 송이 대체작물 조성 지원 등

- [수급안정] 설·추석 등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운영 및 임산물 합동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시범운영 : 전국 8개 권역, 명예감시원 13명 위촉·운영

  * 산림청(공무원+민간 명예감시원)-농관원 임산물 합동단속 : 원산지 표시 계도·홍보 등 184건

- [소비촉진] 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먹거리 임산물 소비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임산물 공동브랜드 '숲푸드'를 출범하였습니다.

  * '숲푸드 대축제' 등 행사 운영, 대형 유통 플랫폼(쿠팡·네이버 등) 임산물 전용관 운영 등

- [제도개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유림경영 촉진 및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임업진흥법」 개정 발의·상정

  * 임업분야 세제(임업분야 소득세·자경산지 양도소득세 등) 개선 노력 : 조세지출 건의서(국세·지방세) 제출, 국정기획위원회 임업 세제 개선(안) 보고 및 국정과제 반영 협의('25.7.20), 국회토론회 개최('25.9.9) 등

- [소득지원] 임업직불제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물생산업 품목을 확대*하고 육림업 직불금 필수서류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기준을 완화** 하여 제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임업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에 차나무 추가('25.10월, 고시 개정 完)

  ** 산주 직접 작성 시 위성사진 활용 등 작성방법 간소화('25.8월, 예규 개정 完),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조림, 벌채 등 일부 사업 제외 가능('25.12월, 시행령 개정 完)

- [수출확대]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품목 통합 해외마케팅, 수출 패키지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여러 품목의 수출기업이 연합한 해외 마케팅 추진으로 일본·미국시장 공동개척(14개사)

  ** 기업별 필요한 수출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사업' 지원(14개사)

- [일자리창출]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산림일자리 창출로 자립경영 지원, 법인화 추진 및 청년산림인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 민간일자리 : 20개 지역 82개 그루경영체 지원을 통해 귀산촌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지역주민 580명 참여 및 5개 신규 법인 전환(누적317개)

* 청년 성장 :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층 진입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온·오프라인 산림일자리 소개,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o 임업을 통해 생산된 **국산목재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목재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 [목재산업육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고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화 이용 여건을 마련**하여 국산목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목조건축 실연사업 7, 친환경 목조전망대 5개소 등 '25년 신규 조성 추진으로 공공부문 국산목재 활용처 대폭 확대('24, 누적 23개소 → '25, 34개소)

** 단계적 이용 방안 마련 간담회(4.21, 7.17), 국회 '신 산림국부론 포럼'(10.1.) / APEC 정상회의 내 산불 피해목 활용 가구 공급(산림청, 합판·보드업계(동화기업(주)), 가구업계((주)코아스) 협업)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국산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원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계 여건을 개선** 하였습니다.

* 「원목 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원목에서 제외되는 산불 피해목을 구분함으로써 미이용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원재료 경합 완화('25.2)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및 국산원목의 산업용재 활용 안정화를 위해 국산원목 및 수입펠릿 REC 가중치를 1.5→0.5로 점진적 하향 조정(REC 관련 고시 개정, '25.10)

- [임도확충]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충으로 산림 순환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20년부터 국유림에만 조성 중인 산불진화임도를 '23년부터 공·사유림에도 도입 ('25년 산불진화임도 444km, 국가임도 360km, 지방임도 84km)

o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결과의 현장 도입·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고품질 산림종자를 확보·저장하고, 단기소득임산물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량·효율을 대폭 개선하도록 R&D를 추진했습니다.

* 디지털 기반 우수종자 생산·공급 R&D(우수종자 결실·수확시기 자동예측 등), 임업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R&D(AI기술 기반 임산물 성숙도 판단 및 및 수확·운반 자동수행 등)

- [연구확산] 산림과학기술 우수 R&D 시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혁신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했습니다.

* R&D 성과물(산불지연제) 적기 혁신조달(148톤)로, 대형산불 확산 억제 및 혁신기업 초기 정착 지원(매출 4.5억 → 43.8억, 10배 증)

** K-산불지연제의 해외 수출(캄보디아 60톤, 파라과이 8톤)로, K-산불 기술력의 국제 판로 확보 교두보 마련(4.5억 원 규모 수출 완료)

【 주요 정책성과 】

o 산림청의 이러한 임업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실제 임산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내외적 악조건에서도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정책자금 융자 등 임업인을 종합 지원하여,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적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전문임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 전문임업인(명, 누계) : ('23) 26,153 → ('24) 27,933 → ('25) 잠정28,988

-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유통·소비를 활성화하여 수실류(3.4%↑), 약용식물(3.8%↑)을 중심으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규모를 증대하였습니다.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억원) : ('23) 24,706 → ('24) 24,571 → ('25) 잠정24,964, 1.6%↑

-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운영 및 합동단속을 통해 안정적이고 올바른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밤·대추 등 주요 임산물 물가상승률 조절 : 설 3%, 추석 5% 이내

- 새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임업의 특수성과 농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업 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600 → 3,000만원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7월)」 반영, '26.1.1부터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성과 목표 】

o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임업경영 지원을 통해 임업 국내 총생산(임업GDP)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전략목표 성과지표(목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3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4	'25	'26	'27	'28	'29	'30			
임업 국내 총생산 (십억원)	2,223	2,245 (잠정)	2,268	2,290	2,313	2,336	2,360	대내외적 요인으로 임업GDP 감소 추세이므로 '26년부터 반등, 연 1% 상승을 가정하여 목표 2,360으로 설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임업 GDP (표준산업분류 상 육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생산액의 총 합계)	한국은행 발표자료

【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

o 목표 달성을 위해 산주·임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며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을 확충하며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26~) 등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도입

- 임산물 재해보험 개선 및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등 산주·임업인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임가의 수요·보험화 가능성을 고려한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고사리, 마, 노지 표고버섯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등을 통한 임목재해보험 도입 등

- 먹거리 임산물 공동브랜드 '숲푸드' 활성화를 통해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숲푸드' 참여 임가 확대 및 업무협약을 통한 소비저변 확대(급식시장 진출 등)

- 임업직불금 주업기준 개선* 등 자격요건 완화, 단가 인상 및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통해 수혜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임산물생산업 면적 3→1ha, 판매액 120만원 또는 경영투입비 60만원 등 농업 수준으로 완화

  ** 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으로 단가 상향, 밀원수 조림·산림경관 조성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 추진

o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인식 확산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30년 임산물 수출액 5.5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 주요 수출국에 '안테나숍'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 수행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특화시설을 조성하고, 품목 간 통합마케팅 확대

o 지역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승계하는 사업 추진 및 산림분야 청년 인재 육성,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연계지원 강화

  * 창업보육매니저를 통한 예비창업팀 발굴 및 사회적경제 육성(도약·성장)

- 청년 취·창업지원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산림일자리 정책 발굴·육성

  * 거버넌스 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특성화고 지원, 임업인특성화교육, 해외인턴, 정원 실습보육공간 조성

o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대로 고부가가치 목재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등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지속 확대

  * 2026년 목재친화도시 신규 2개소, 목조건축 실연 신규 4개소, 친환경 목조전망대 신규 4개소 조성('25, 누적 34개소 → '26, 44개소)

- '산림청 목조건축 심의위원회'와 '목조건축 서비스자문단'을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목조건축 진입장벽 완화

o 목재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이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기반 마련으로 소비자 접근성 제고
- '목재이용=탄소중립'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국민들이 생활 속 목재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와 정책사업 추진

o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반 원료가 되는 산림자원 발굴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R&D로,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전임상(LAB 스케일) 완료된 산림자원 기능성 소재의 임상실험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원료 발굴
- 산림 바이오 거점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기능성 검증이 완료된 산림 원료의 양산화(자동·고속화) 체계 구축

성과지표 임목축적량

□ 성과지표 개요

〈 임목축적량(㎥/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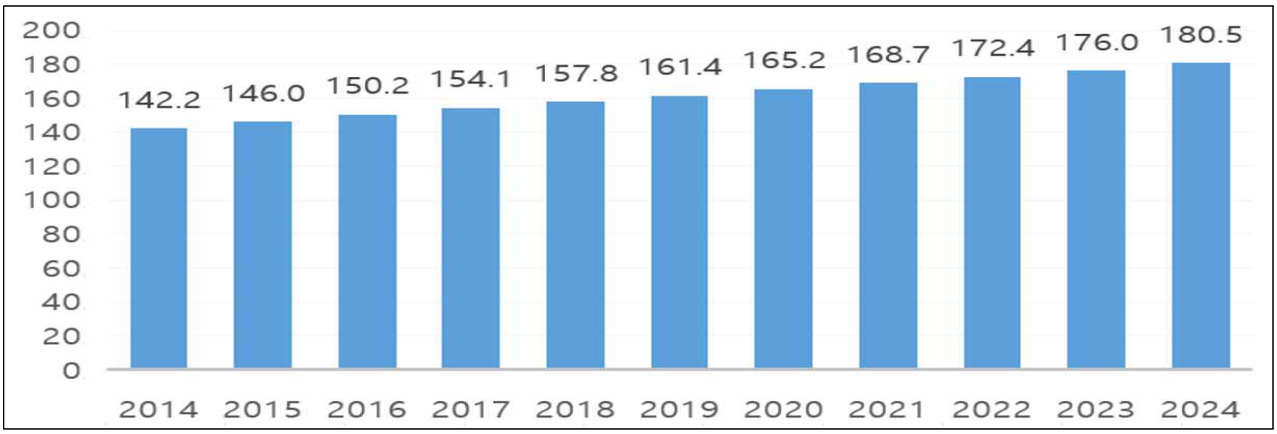
- 개념 :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임목축적량은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 대응을 통해 임목자원의 증식 및 보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지표임
- 조사기관 : 산림청
- 조사대상 : 전국 산림 대상 4,000개 표본점
- 조사방법 : 임업통계연보(임목축적은 5년 단위로 발표되며 그 외 잠정치 발표)
- 측정산식 : 임목축적(㎥)/산림면적(ha)

□ '25년 측정결과

o 임목축적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꾸준히 증가하여 당초 목표치인 '24년말 기준 180.5㎥/ha를 달성하였습니다.

-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산림개발 및 산림휴양·이용에 대한 국민수요 확대로 인위적 산림훼손 및 2차 산림재해(산불·산사태 등)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임목축적 현황(㎥/ha) >



□ 성과분석

o 산불, 산사태, 병해충, 불법훼손, 지구 온난화 등 인위적·자연적인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인명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역량 강화) 산림재난별 예방 활동 적극 추진,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확충, 산사태정보체계 개선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산림재난의 맞춤형 예방·대응활동 주요내용 >

√ (산불)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① 인공지능으로 산불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ICT 산불감시 플랫폼 확충하여 산불 감시체계 강화

☞ ICT 플랫폼(누적) : ('23) 10개소 → ('24) 30개소 → ('25) 45개소(+15)

②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 추진(148천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25년 22,650 마을)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홍보 활동 강화

③ 산불 지휘전략 수립, 교육과정 신설 및 진화자원 확충으로 산불 진화역량 강화

☞ 산불진화 통합훈련(10.22: 국무총리참관, 11.6: 대통령참관 등) 및 '산불진화 교재' 개발·발간

☞ 국외 임차헬기(3대) 도입·운영,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신규도입(64대), 산불특수진화대 확충(60명) 등

√ (산사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및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복구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①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으로 예측정보 정확도·신뢰성 강화 및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등 총력 대응

☞ 산사태 예측정보 등 위험정보 수신대상 확대(당초 산림부서 → 확대 관계부처+재난총괄부서)

☞ 산사태 위험정보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app' 위치조회 개선

☞ 위기경보 발령(37회),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11,757회), 상황관리 철저 등 요청(938회)

② 영남권 산불피해지 긴급 점검·복구 및 산사태 위험정보 제공을 통한 2차피해 예방조치

☞ (응급조치) 생활권 위험목(3,946그루) 긴급제거(~5.30.) 및 응급복구 실시(~6.23.)

☞ (위험정보) 산불피해를 반영한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 긴급조정 및 등급조정에 따른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재산정 * 산불피해지역 산사태위험 1,2등급 비율 : 경북, 경남 13%p, 울산 2%p 증가

☞ (예측개선) 과거사례 기반(최대 토양함수량 대비 60% 수준에서 산사태 발생)으로 임계 토양함수량을 분석하여 산불피해지의 산사태예측정보 생성 기준 하향 조정

☞ (안전점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위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487개소), 임도(9개소), 사방시설(227개소) 집중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조치(현장조치 4개소, 보수·보강 3개소, 대피소 대체지정 11개소 등)

√ (병해충) 가용자원 총동원 및 전략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총력 대응

① 가용자원 최대 확보·투입으로 전년(162만) 대비 61% 증가한 역대 최다 방제

☞ 방제실적(만그루) : ('23) 163 → ('24) 162 → ('25) 역대최대 **261만그루** 61%↑

예찰실적(만ha) : ('23) 444 → ('24) 351 → ('25) 역대최대 **448만ha** 28%↑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예찰 및 감염목 진단 체계 구축

☞ 헬기광역.드론비가시권.지상근거리의 3중 예찰과 QR시스템 정착, 유전자진단키트3일→30분 보급 및 AI·LiDAR 등 감염목 자동선별 체계 도입

③ 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으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기반 구축

☞ 신속 방제를 위해 재해대책비 719억원 등 1,772억원 조기 투입('25.1월)

☞ 수종전환('25년 7천ha) 방제 도입 및 고사목 방제기간(2~3개월) 확대

- (협업 강화) 소방청 등 정부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대응하였습니다.

< 협업을 통한 산림재난 대응 사례 >

√ (산불) 선제적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국 동시다발 산불 유관기관 총력 대응(3.22~6.3, 산림청 산불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주요 시기별(설 연휴, 산불특별대책기간, 청명.한식 등) 산불방지대책 수립

☞ 대통령주재 회의 등 산불관계관 회의를 통해 범부처 총력대응

☞ 관계부처 합동「산불 종합대책」,「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마련

√ (산사태) 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 간 긴밀한 재난 대응 협업체계 구축

-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재난 공동 대응체계 구축

☞ (현행화) 행안부 **급경사지,** 농식품부 **산림연접농지,** 국토부 **도로비탈면,** 산업부 **발전시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등 207만건**

☞ (협의체) '디지털 사면통합 실무협의체'를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까지 확대 구성·운영*

* ('24년) 23명 → ('25년) 58명(산림청+관계 중앙부처+신규17개 시·도+확대민간전문가)

√ (병해충) 외래·돌발병해충 유·출입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농림지 동시발생 및 외래·돌발해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예찰·방제

☞ 외래·돌발병해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제주권역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2회)

☞ 농진청, 지자체 합동 농림지 병해충 공동예찰 및 방제(3,174ha)

☞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환경부 소관) 연구·방제기술 지원

o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 예방·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 추진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단속 결과 : 입건 1,200건, 과태료 687건(134백만원 부과), 드론단속 970건(111적발)

< 산림 보전·복원강화 주요내용 >

√ (산림보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 및 건강성 제고

① 시기별·계절별 집중단속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지자체(산림, 하천 담당 부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 위법행위 발생빈도 높은 시기(봄·여름)는 사법인력 총동원 집중단속 실시

* 집중단속 결과 : 입건 506건, 훈방·시정 307건, 과태료 687건 및 133백만원 부과

② 인공위성을 활용한 불법산림훼손 의심지 조사로 적기(공소시효 내) 사법 처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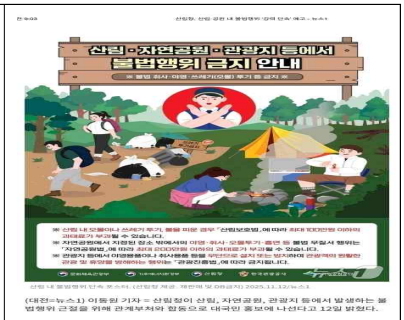
☞ 산림특별사법경찰 1인당 관할 산림면적이 5천ha(축구장 5,114개)로 광범위하며, 산림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단속사각지대 최소화

③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감시단 참여로 산림보호활동 강화

☞ 국유림 보호협약(746개 마을, 1.8만명) 및 숲사랑지도원(2.1만명) 등 민간감시단 지원

여름철 집중단속

의심지 훼손조사



합동캠페인

√ (수목원조성) 녹색생활 인프라로서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①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종자확보 및 수종 발굴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내염성식물 종자 확보(48종) 및 생육 우수 수종 발굴(25종), '26년 사업 예산 878억원 확보

②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추진 및 총사업비 증액 확보

☞ 지역 특색을 고려한 공간구획 등 기본 설계('24.12.~) 및 총사업비(1,473억원→1,815억원) 증액

③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및 국립생태숲 지정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 관리·연구·교육·체험 위한 공간설계('24.12.~), 최초 국립 생태숲 지정

√ (산림복원) 자생식물을 활용한 생태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 마련

① 산림복원사업의 대상·범위·공간 등 지속적 확대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제고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복원, 보호지역 산불피해지 복원 등으로 확대

② 권역별 자생식물 종자 공급기반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최초 목구조 자생식물 온실 조성(1개소), 자생식물 종자(960kg) 및 묘목(20만본) 민간 대행생산(3억원 매출)

③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26~'25)' 수립 및 백두대간 가치의 인식 확산

☞ 백두대간법 시행 20년간 운영 성과 및 미래비전 공유, 20대 명소 선정 등 대국민 홍보 추진

④ 산림복원기술자·전문업 도입으로 산림복원사업 수행체계 개편

☞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신설('25.12.), '산림복원기술과정' 신설('25.3.)

□ 향후 추진계획

o 첨단 정보기술과 현장에 바탕을 둔 예방대책 수립 및 대응역량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산불) 산불 안전공간*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단계** 축소, 산불진화자원 및 산불진화대원 확충***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 산불 안전공간 : ('25) 181개소 → ('26) 301개소(+120)

** 산불대응 단계 : (현행) 초기+확산 3단계 → (개선) 초기+확산 2단계

*** 산불진화헬기 : 신규도입1대 + 국외임차5대 / 다목적 산불진화차 : +12대 / 산불특수진화대 +60명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및 관리 인력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으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겠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확대 ('25년: 53천개소→ '26: 63천개소)

** ('25년)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 → ('26년) 산림재난대응단 9,272명(12배↑)

*** ('26년) 산림유역관리사업 138개소, 사방댐 478개소, 산지사방 323ha, 계류보전 451km 등

- (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 수종전환 시행(7천ha) 및 관리대행 도입하고, 매개충 활동주기를 고려한 고사목 방제기간 확대와 관계기관과의 방제 협력을 위한 현장소통 및 지원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종다양성의 과학적 보전·복원 관리체계 강화로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겠습니다.

- (보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분야별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방송 모니터링 강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수목원조성) 국립새만금수목원(~'27), 국립완도난대수목원(~'30), 국립울진산림생태원(~'27)의 차질없는 조성을 통해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의 중점기관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 (복원) 인위적 훼손지에서 생물다양성 취약지까지 산림생태복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의 기후적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성과지표 | 국제산림협력 외교 지평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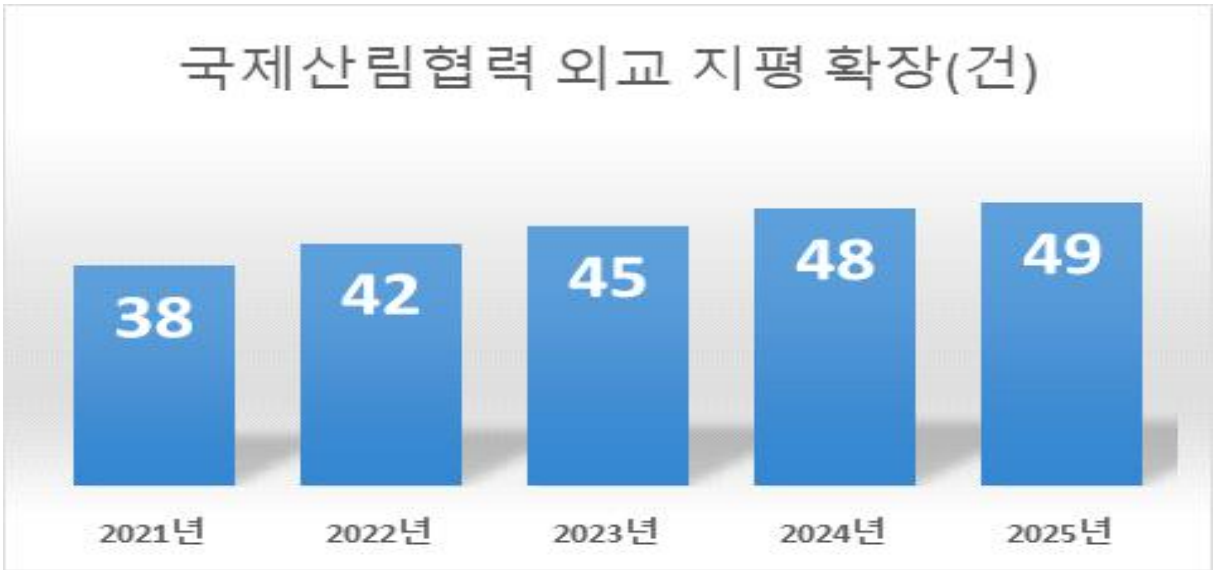
□ 성과지표 개요

〈국제산림협력 외교 지평 확장〉

- 개　　념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 산림 부문에서의 중추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관계 구축 성과
- 조사기관 : 산림청
- 조사대상 : 우리나라와 타 국가, 국제기구, 다자산림협의체 간 MOU 체결 및 갱신
- 조사방법 : 양자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갱신 결과보고서, 국제기구와 국제산림 파트너십 가입의향서 및 결과보고서
- 측정산식 : 당해 기준 국제산림협력체결 누적 건수

□ '25년 측정결과

o 불확실한 외교관계 속, 산림협력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해 2025년 기준 국제산림협력 체결 누적 건수는 전년(48건) 대비 1건 증가한 49건을 기록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o **K-국제산림협력**의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하고, REDD+ 국가별 **운영표준** 정립과 **예산 확대**로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중남미 REDD+ 사업 확대를 위해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대규모 부지(630만ha)를 확보하는 MOU를 체결('25.1)하였습니다.
-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24.2)에 따라 주요 협력국별 운영표준을 마련('25.12)하여 현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25.5) 및 관련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5.4%(6.9억↑) 증액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온두라스 양해각서 체결('25.1월)

온두라스 타당성 조사 착수('2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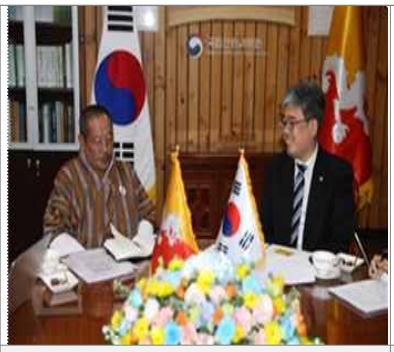
o 국가 간 호혜적 관계를 통해 **경색된 외교관계를 '산림'으로 타개**하여 **양자협력 내실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 제8차 한·중·일 산림국장 회의(9월), 고위급 양자(부탄, 베트남, DR콩고), 산림협력위원회(호주, 우즈벡, 캐나다) 등 산림정책 현안 논의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 베트남으로부터 국립새만금수목원 맹그로브 수종 도입, REDD+ 사업 추진 합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협력 국가와 ODA, 목재교역, 다자협력, 위성 등 다분야 산림협력 및 논의 실시

- 공무원 연수 방한 및 산불 역량강화 파견 지원으로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DR콩고, 튀르키예, 프랑스 등 10여 국에 산림재난 대응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한일중 산림국장회의


한-부탄 양자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고위급 회의

o **UN이 지정한 '산림' 관련 기념일**을 알리기 위한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CBD, UNCCD) 워크숍·포럼** 개최로 **정책고객·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 친화적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세계 산림의 날**(3.21)은 빈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외교관계자와 교류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계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6.17)에는 국회와 함께 국제적 가뭄 이슈에 지구적 해법, 청소년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 또한, UN기구(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국내초청 워크숍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세계 산림의 날(3.21)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6.17)

평화산림복원 국제포럼(9.1)

□ 향후 추진계획

o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확산하고 글로벌 산림현안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외교전략에 부합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과지표의 향후 4년간(2026년~2029년) 목표치인 연간 1건씩 국제산림협력 확대를 딜성할 수 있도록 외교 지평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산림정책 선진국인 한국 정부와의 공조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협력네트워크 강화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 나아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통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산림외교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